

碩士學位論文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전략 발전방향 연구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盧 正 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强容培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전략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U. S. Alliance Strategy by the Change of
U. S. Strategy of Northeast Asia's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盧 正 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强容培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전략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U. S. Alliance Stretegy by the Change of
U. S. Stretegy of Northeast Asia's

위 論文을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盧 正 虎

盧正虎의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동맹이론의 고찰과 분석의 틀	5
제 1 절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5
제 2 절 동맹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이론	10
제 3 절 한미동맹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20
제 3 장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27
제 1 절 국제질서의 변화	27
제 2 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특징	32
제 3 절 주변국의 정세변화와 전망	36
제 4 장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 관계 분석	40
제 1 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동북아의 의미	40
제 2 절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분석	43
제 3 절 한미동맹 형성과정과 성격변화 분석	53
제 4 절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설정	68
제 5 장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 발전방향	74
제 1 절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76
제 2 절 한미 위협인식 구조에 대한 대응방안	78
제 3 절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방안	86

제 6 장 결 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100

【 표 목 차 】

[표 4-1] 년-위너안에 따른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	55
[표 5-1] 동북아시아 주변국 국방비 및 군사력	8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동서간의 냉전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탈 이념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에도 지역적으로는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및 경제적 갈등 등에 의한 마찰과 분쟁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생존영역인 한반도는 미, 일, 중, 러 4강의 이익이 교차하고 이념적인 분단이 현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4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안보는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륙세력에게는 해양진출의 발판으로 그리고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들의 이해관계 변화가 한국안보의 주요변수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이 종식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는 방위역량 증대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유지, 발전되어 왔다. 한미동맹이 출범한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2003년부터 한미 양국은 기존의 동맹 및 주한미군의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국방 당국간 『미래 한미 동맹정책구상(FOTA :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 협회를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동맹조정의 추세는 2004년 8월 미국 측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 전에 차출하고 향후 주한미군 규모조정과 관련된 한미 간의 별도협의를 시작함으로써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안보전략,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내의 변화된 시각은 새로운 한미동맹의 개념과 논리에 대한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신안보전략하에서 기존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동맹의 효용성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탈냉전 및 경제적, 민족주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을 경쟁자 혹은 적대자로 인식하는 국가들의 적대적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불특정 다수 세력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구도가 형성되면서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군사 활동의 자유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맹지원체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¹⁾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에서 지역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고 지역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합된 지역전략을 구축하여 기존의 한미, 미일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동맹관계의 모색, 그리고 세력 균형전략을 추구할 것이다.²⁾

따라서 국가들은 동맹을 자국의 이익, 특히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흔한 수단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힘을 상대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면서 인식된 위협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한 안보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서 동맹이라는 체제가 생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 고려사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를 토대로 하면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이 지난 56년간 우리의 안보목표와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1) 이삼성,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3), p. 24.

2) 박건영, 남창희, 이수형,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p. 45.

때문에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는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과거 한미동맹 지속의 핵심이었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대체할 새로운 군사동맹의 논거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003년은 한미동맹이 형성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때문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발전적인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하게 동맹 그 자체로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 내용들이다. 이는 동맹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찾아 이를 분석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동맹형성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동맹을 체결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하여 동맹국을 선택하는가? 동맹이라는 개별 안보제도를 둘러싼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세력 배분구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타 집합적 안보제도는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동맹주도국이 동맹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강대국-약소국간 세력 불균등은 동맹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외에도 개별적 동맹의 특성과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한미동맹의 결과물인 주한미군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역할, 미국의 신 안보전략과 연계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 분담 등에 관한 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형성된 이후 초기의 동맹목적 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동맹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고찰하기 전에 동맹관계에 있

어 변화의 조짐들을 고찰하여 보고, 최근의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각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시사점과 함축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정치 이론인 동맹이론과 세력균형 및 세력전이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따른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소들과 이에 따른 미국의 동맹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동맹전략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2장에서 살펴본 후, 3장에서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4장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21세기 바람직한 미래 한미동맹의 모습을 5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래 한미동맹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고, 그 자체로도 새로운 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전망위주로 연구를 하였다.

제 2 장 동맹이론의 고찰과 분석의 틀

제 1 절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유형

1. 동맹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동맹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 또는 그 결과로서 성립된 제휴관계³⁾를 말한다. 그리고 동맹조약은 어떠한 경우 군사적 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조약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영어의 Alliance는 구성원들 공동이익과 목표의 추구를 위해 성립된 연합 또는 단체를 말하며, 연합, 협조, 협력의 개념⁴⁾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원국 이외의 나라에 대하여 군사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하기 위한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제휴”로 정의하고 있고⁵⁾, 오스굿(Robert E. Osgood)은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협조적 노력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latent war community)”라고 동맹을 정의하고 있다.⁶⁾ 이는 가변적인 국가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국가간에 군사력을 위주로 국익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이다.

한편 부잔(Barry Buzan)은 “동맹은 국가안보전략을 함께 묶어서 힘의 분포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국제차원으로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⁷⁾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철형은 “행위자 A가 행위자 B와 세력 경

3) 한국어 사전편찬회 편, 『한국어 대사전』, (서울 : 현문사, 1976), p. 456.

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 G&C Merriam Company, 1964), p. 56.

5)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4.

6) Robert E. Osgood.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68). p. 19.

7) Barry Buzan. *People, State,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 in the Post-Cold War Era* (Havester Wheasheaf. 1991), 김태현 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 나남, 1995), p. 376.

쟁을 하기 위해서 A처럼 B와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행위자와 세력을 규합하는 방법으로, 세력 균형을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온 방법의 하나”⁸⁾라고 정의한다. 이의 정의에 따르면 동맹은 세력의 균형이나 확산 등 세력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가안보와 국제안보간의 연계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성렬은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국의 안전보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조노력의 행위”⁹⁾라고 동맹을 정의하고 있고, 국방대학교에서는 “2개 이상의 복수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집단적 자위의 방식으로, 참여국들이 분명한 우·적 개념에 입각하여 적으로부터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투입하는 협력적 노력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¹⁰⁾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맹은 특정한 환경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 달성,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특정 환경이 변화하거나, 혹은 위협이 사라지거나, 또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동맹관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일방이나 상호간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동맹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동맹은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2. 동맹의 목적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국가들 간의 동맹의 형성과 와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들은 동맹을 자국의 이익, 특히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흔한 수단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는 주된 목적은 자국의 힘을 상대적으로

8) 이철형, 『고시정치학』, (서울 : 법문사, 1987), p. 585.

9) 조성렬,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재정의”, 『통일정책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 91.

10)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27.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인식된 위협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즉 동맹관계란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약속한 국가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동맹관계는 그 목적에 따라 국력 집합적(Capability Aggregation) 동맹과 자치·안보 교환적(Autonomy-Security Trade-Off)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국력 집합적 동맹이란 서로의 국력을 모아서 적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거나 전쟁억지를 추진하며 동맹국들의 지원은 자국이 오랜 시간 내부적으로 축적하여야 하는 국력-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등을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국력증대 수단으로 사용되고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 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칭적(Symmetric) 동맹이라고도 한다.

반면, 자치·안보 교환적 동맹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국가들 간에 주로 맺어지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비대칭적(Asymmetric) 동맹이라고 하며, 약소국의 경우에는 강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아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동맹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반면, 약소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하여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부담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 외교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치권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약소국은 강대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은 서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약소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경우 약소국이 이러한 비대칭 동맹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1) 이춘근(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p. 43.

12) 김우상, 『신한국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 나남신서, 2001), p. 37.

3. 동맹의 유형

동맹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방위조약」으로서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약속하는 동맹관계를 말한다.

둘째, 「중립조약(Neutrality Pact)」 또는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은 서명국들 중 어느 한 쪽이 제 3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서명국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동맹관계이다.

마지막으로 「협상(Entente)」은 서명국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제 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경우 서명국들 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 지 등에 관한 차후의 대책을 서로 협의할 것에 동의하는 관계이다. 이때 방위조약의 경우 동맹국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협상의 경우 자율성이 가장 높다.¹³⁾

이처럼 국력신장을 위한 동맹형성을 모로우는 「국력 집합적(capability aggregation)동맹」이라 하였다. 그리고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치권의 일부를 강대국에게 양도해주는 동맹을 「자주-안보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적 동맹」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력 집합적 동맹은 힘이 동등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다. 국가들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선호하지만 강대국은 국력신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자치권을 양도받고 약소국들 보호해주는 자주안보 교환적 동맹을 형성한다. 따라서 국력 집합적 동맹을 「대칭적(Symmetric)동맹」이라한다.¹⁴⁾ 이러한 동맹관계에서 기대되는 이익이란 국력증대와 안보라 할 수 있다.

동맹의 범주는 냉전기간 동안에 자국의 안보상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13) Bueno de Mesquita. *The War Trap*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 114-115.

14) James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1991), pp. 904-933.

대응하는 형태인 정치 및 군사동맹이 주된 범위였다. 그러나 탈냉전 시에는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증대되자 비군사적인 분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동맹은 주로 자국의 이익과 전략을 위한 역할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동맹조약은 공약이행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공수동맹」과 같은 「자동촉발조약」 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상호안전보장조약」이 있다. 현대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자동촉발조약」은 거의 없다. 또한 체결국의 국력과 보증하는 공약 유형에 따라 「강대국 의존형, 국제적 의존형, 무장 중립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강대국 의존형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NATO형」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법적인 동맹을 맺고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며, 군사지휘체제는 체결국 중 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합지휘형태를 취한다. 여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에도 한미동맹 등이 해당된다. 둘째, 「일본형」으로서 체결국간 동맹조약을 맺고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며 군사지휘체제는 체결국이 각각 운용하고 유사시 협조기구를 편성 운용한다. 미·일 동맹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호주형」으로 호주, 싱가포르, 태국처럼 주변에 주요한 위협이 없으면서 외국 주둔군은 극소수이거나 없기도 하며, 군사지휘체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형태이다.

위의 세 가지 형태 중 군사동맹의 응집력은 나토형이 제일 강하며 외부 위협이 발생하면 동맹효과가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일원화된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어 신속한 연합전력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군사력이 주둔함으로써 동맹국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사지휘권이 일원화되면서 약소국의 군사주권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힘의 논리와 실리추구가 냉철하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국제체제에서 동맹은 강대국의 패권추구와 약소국의 내·외부 위협의 감소라는 목표가 일치되어 결성되는 것이다. 많은 동맹의 유형이 있겠으나, 결국 동맹은 체결국들의 달성목표가 동일하고 상호 외교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원

인 발생시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제 2 절 동맹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이론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세력 균형의 한 방법으로 자국의 세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있다. 그러나 이외에 타국의 힘을 결집시켜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체결국의 정치, 문화, 사회적 경향이 같거나 역사가 유사하고, 상호이익의 요소가 많아야 한다. 또한 각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힘과 상호 전략 가치가 높게 나타나야 하는 조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야 동맹의 응집도가 높게 나타난다.¹⁵⁾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 기초한 「세력균형이론」에서, 동맹은 한 나라의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강력한 위협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현실주의의 대표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다국간 체제에서 작동하는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동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공식적 동맹관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맹의 결성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동의 적이 어느 대상인가에 대한 확고하고 정확한 이해관계이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그는 다섯가지로 세부 동맹 작용요소를 정리하였다. 그것은 동맹조약의 본질적인 성격(이해관계, 정책, 이념동조), 동맹이익과 세력의 배분, 동맹국의 전체적인 이익의 범위, 동맹지속의 시간범위, 동맹국가들의 공통정책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¹⁶⁾ 여기에서는 연구 목적상 분석범위를 이데올로기의 역할, 이익배분의 비율, 동맹의 형성시기에 따른 이해관계의 범위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동맹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물질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가 없는 동맹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동맹은 실제적인 국가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며 정치적 단결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15) 박상식, 『국제정치학』, (서울 : 집문당, 1997), p. 45.

1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4th ed. (New York : Alfred A. Knopf, 1973), pp.183-186.

이념의 공통성이 동맹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겐소는 이러한 요소가 국가행위의 도덕적 확신까지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정치적 이념의 공유가 동맹의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만든다거나 실제적인 정책과 행동에서 상대 동맹국가가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줄 것 같은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유하는 이익의 배분 정도에서도 동맹의 결속정도를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익의 배분이 완전히 상호적일 때, 즉 각 동맹국이 동맹이 정한 규약준수 내지 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한 만큼 이익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동맹관계는 강화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동맹국간의 힘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현실에 있어 이익의 배분과정은 동맹 내부의 권력배분 상황을 반영하게 되고, 중요한 점은 그것이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반영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⁷⁾ 이렇게 이익, 정책 그리고 국력간에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공유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의 차원에서도 동맹의 결속정도를 알 수 있겠다.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결속되기 위해서는 그 동맹유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분담이 이익의 측면과 맞물려 균형을 이루어야만 동맹국간에 손익계산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은 탈냉전이후 자국의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동맹국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동맹과 평화 시의 동맹도 그 결합 차이를 볼 수 있다. 전시에는 동맹국간에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평화 시에는 국가이익의 일부 측면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개 전쟁을 계기로 동맹이 성립되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크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동맹국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들은 분산되고 이질적으로 변하기 쉽다.

동맹의 형성조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홀스티(K. J. Holsti)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⁸⁾ 홀스티는 “현대에 있어서 공통의 경제적 문제를 안

17) James Morrow(1991), op.cit., p. 185.

18)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2nd ed (Englewood

고 있는 국가들이 무역문제에 관하여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성과 활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는 국내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영토의 확대나 혁명의 확산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기도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침략적인 성격의 군사동맹을 결성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의 측면보다는 지지기반이 약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순전히 국내적인 정치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동맹이 결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에 대한 외부의 보호를 확보할 필요에서 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동맹에 미치는 거리상의 정도나 지형적 특징의 영향에 대한 것이 있다. 냉전시 미국은 구소련과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 인접한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해서 공산권을 포위하는 군사지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경우 동맹 결성의 주요 조건은 바로 지리적 인접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동맹결성의 이유로서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홀스티는 동맹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기반은 상호간의 공통된 위협인식 내지 공포심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렇게 동맹은 공통된 적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적 역할로서 결성된다.¹⁹⁾

이와 더불어 홀스티는 동맹국간에 긴장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첫째, 동맹국간의 동맹 목적의 이탈, 둘째, 동맹국간의 정치·사회적 가치의 분리 등이 그것이다.²⁰⁾ 전자의 경우 설명하면, 만일 동맹 결성의 목표가 불일치를 이루게 되고 어느 한 쪽 동맹국의 잠재적, 현재적 적에 대해 동맹국이 공통의 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다면 그 동맹관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로 인하거나 정치·사회적 지지의 변화로 인하여 동맹국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동맹의 결속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liffs:Prenrice-Hall, Inc., 1972), pp. 111-113.

19) George Liska, *Nations in Alliance :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p. 12.

20) K. J Holsti(1972). op.cit., pp. 118-121.

한편 월트(Walt)는 그의 저서인 「동맹의 기원(The Origins of Alliance)」에서 힘의 균형이 아니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첫째, 국가는 위협국에 반하여 동맹을 형성한다. 둘째, 국가는 위협국과 함께 동맹을 형성한다. 셋째, 국가는 유사 이념의 동맹국을 선택한다. 넷째, 외국원조는 동맹국에 유인작용을 한다. 다섯째, 정치적 침투력은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 가설은 「균형(Balancing)」이고, 두 번째 가설은 「편승(Bandwagoning)」이다. 즉, 균형은 위협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이며, 편승은 위협 세력과 동맹을 형성해서 위협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국제 정치현상에 있어서는 편승보다는 균형동맹이 이루어지며, 균형동맹이 이루어지질 못할 경우 편승정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약소국은 균형 동맹에 참여할 때 동맹세력 증대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적대국가의 원한을 사기가 쉽기 때문에 균해보다는 편승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¹⁾

월트는 연구 결과 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리적 인접 정도, 공격적 능력, 그리고 인식 가능한 공격의도 등을 주장하였다. 즉, 보다 인접한 국가, 방어능력보다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현상유지보다 공격의도를 가진 국가 등에 대한 견제로써 동맹은 형성되기가 쉽다는 것이다.²²⁾

월트에 의하면 국가들은 동맹국의 힘을 빌어 잠재적 적국들의 침략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전쟁 발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기대 이익적 측면에서 동맹을 형성한다.

그러나 동맹형성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기대비용도 존재한다. 한·미 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국군의 주둔 비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되어 자국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경우나 동맹국으로부터 직접침공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안보 감소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

21)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17-19.

22) *Ibid*, p. 5.

다. 또한 동맹형성의 기대비용으로 「자율성의 상실」이 있다. 자주안보 교환적 동맹에서 보듯이 국가들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자주권의 일부를 강대국에게 이양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합리적 정책결정자라면 자주안보 교환적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지불하는 기대비용(자주권의 이양)을 최소화하고 기대이익(안보획득)을 최대화하려 할 것이다, ‘중추적 동반자 역할’이란 승자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최소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한 행위자를 그 연합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행위자가 담당하는 중추적 동반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러한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는 승자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세력기반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만큼이나 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승자연합의 다른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위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²³⁾

다음은 국제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한 「패권안정 이론」에서의 동맹을 살펴보자. 「패권안정 이론」은 찰스 킨들버거(Chales Kindleberger)나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등의 학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패권국가 혹은 지배적인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세계에 걸친 패권 권력구조야말로 국제체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들을 수립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패권국가의 쇠퇴는 자유경제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²⁴⁾ 패권안정 이론에 적용되는 패권국가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탁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양국체제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양국체제의 주인공으로서 양국체제를 해체하고 전 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켰다. 현재에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의 외교·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안정은 유

23) 김우상, 『국제관계론 강의』, (서울 : 한울, 1997), pp. 43-52.

24) 김희영,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에 관한연구", (서울 : 국방대학교, 2003), p. 16.

일 초강대 패권국인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가치체계와 이익, 그리고 전략이 세계 모든 형태의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동맹의 경제적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Economic Theory of Alliance)이 있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국가간의 동맹은 하나의 재화로 여겨질 수 있다. 재화는 효용을 창출하지만 그 재화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동맹을 체결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에서 오는 이득과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⁵⁾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이론 중에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 Public Goods)이론」이 있다. 이는 올슨(M.Olson, Jr)과 제크하우저(R. Zeckhauser)가 제시한 것으로 동맹에 의한 공동안보는 본질적으로 소비의 비경쟁성과 편익의 비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맹이 공공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맹 각국은 동맹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안보를 성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큰 나라는 부담을 많이 지고, 작은 나라는 무임승차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끝으로 「동맹의존(Alliance Dependence)이론」이 있다. 후견-피 후견관계(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와 같은 상호, 비대칭적인 역학관계를 가진 동맹에 참여한 약소국이 그 동맹에 구속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버넷(A. Bennett)등이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상호 비대칭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동맹 자체에 종속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적국과 협력관계를 갖거나 자국이 적성국 정책을 지원하지 않게 될 가능성에서 연유하는 두려움과, 동맹자체의 이해는 크지만 자국의 이해는 크지 않은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에서 연유하는 연루(Entrapment)의 두려움이 있다. 결국 동맹 의존론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동맹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서, 동맹결의 불가피성과 함께 동맹유지 과정에서 닥치는 어려움까지 잘 설명하고 있다. “한 국가는

25) 김재한, 『게임 이론과 남북한 관계-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한울, 1995), pp. 142-143.

위협세력에 대한 지속적 안보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동맹에 집착한다. 동맹에 의한 연루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경우에는 동맹 탈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1.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

국제정치이론이 개발된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논의된 이론이 세력균형이론 일 것이다.

세력균형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 가정들과 일치한다. 즉,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체이고, 국가는 단일 행위체(unitary actor)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력의 증대를 추구한다는 가정들을 세력균형이론들은 모두 수용한다. 그리고 국력증대 수단 중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타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거나 전리품을 획득함으로써 국력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국가는 위험부담을 꺼린다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세력균형이론은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해낸다. 가장 대표적인 가설로는 체제내의 국력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을 경우 체제내 안정이 가장 잘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힘이 비슷한 두 세력 간에는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력 균형이 깨어질 때 힘의 우위에 있는 세력이 침략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들 간의 동맹관계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가설도 들 수 있는데, 이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관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에서는 세력균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맹의 형성과 와해를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강대국에 의존하는 편승(Bandwagoning)동맹과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약소국들 간에 힘을 합쳐 균형을 이루는 균형(Balancing) 동맹이 있다.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에 의하면 동맹국의 힘을 빌어 잠재적 적국들의 위

26) 김우상(2001), 전제서, pp. 171-172.

협을 감소시키면서, 전쟁 발발시 승리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균형보다는 편승동맹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승동맹은 비대칭 동맹으로서 약소국의 자치권이 상실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균형동맹의 경우에는 위협세력이 패권세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자주적 존립이 위태롭거나, 동맹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여러 주변국 중 그중에서 보다 국력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유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지역에 위협 강대국이 있을 경우에는 균형보다는 편승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높다.

2.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이론

케네스 오르겐스키(A.F.K. Organski)는 세력균형이론의 가정들 중 동맹관계와 국력의 증대에 관한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면서, 산업화이전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상대적 국력의 변동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세력균형이론가들은 국제체제를 무정부(Anarchic)체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르겐스키는 국제체제를 어느 정도의 질서가 내재한 위계체계(Hierarchical System)로 이해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배국가(Dominant Power)들은 국제체제내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 질서, 국경선과 영토 소유권 등 국제질서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Collective Goods)를 제공하며, 이러한 국제질서는 물론 지배 국가들에 유리한 형태로, 몇몇 만족국가군에 속하는 강대국들에게 그 다음으로 유리하게 유지되어진다.

이와 같이 지배국에 의해 정립된 국제질서는 체제내의 국력의 분포가 지배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된 상태로 있는 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체

27) 김우상(2001), 전제서, p. 175.

제적 위기는 불만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던 강대국들 중 하나가 산업화를 통하여 국력을 급신장하게 되어 지배국가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

강대국가들 중에는 국력의 증대속도 차이에 의해 다른 강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급속도로 부강해지는 국가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국가는 지배국가에 의해 세워진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도전 국가들의 국력이 지배국가의 국력을 따라잡아 두 세력간의 힘이 거의 균등하게 되는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들 국가들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배국가와 도전 국가 간의 전쟁위험은 높아지며, 도전세력과 지배세력간의 세력전이현상이 일어날 때, 도전국가의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두 세력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아울러 세력전이 이론가들은 국가는 동맹관계와 같은 외적수단을 통하거나 산업화와 같은 내적수단을 통해서 국력증대를 도모한다는 더욱 더 현실에 가까운 가정을 바탕으로 세력전이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들은 세력전이라는 현상을 체제내의 지배국가와 특정 도전국가간의 세력다툼으로만 보지 않고, 지배국가와 그 동맹관계를 포함한 지배세력과 도전국가들과 그의 동맹들로 구성된 도전세력간의 경쟁으로 파악하였으며 세력전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배국가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과 도전국가가 선제공격하는 도발전쟁에 관한 가설들도 도출하였다.²⁸⁾

3. 세력균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의 군사동맹에 대한 대립가설

현실주의 세력론의 대표적인 두 대립가설인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이론은 우선적으로 국제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동맹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진다²⁹⁾.

28) 김우상(2001), 전계서, p. 180.

29) 황영배, “군사동맹의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5), pp. 335-343.

1) 동맹에 대한 상이한 해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체제의 근본에 관한 상이한 가정은 군사동맹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견해로 이어진다. 먼저 세력균형이론은 군사동맹을 가장 중요한 힘의 배분장치(Power Distribution Mechanism)로 인식하며, 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동맹에 참여 할수록 체제가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독립이 보장되었을 때 국제체제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세력균형하의 동맹은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체제 균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따라서 동맹의 결속은 결코 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지니게 되어 체제의 상황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지속성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력 균형이론은 동맹을 힘의 결집(Capability-Aggregation)으로 인식하여 일단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세력전이이론에서 군사동맹은 초강대국에 의해 보장, 지원되는 안보 및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되는 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는 초강대국이 자신의 체제 내에 있는 동맹 국가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지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국가 간 상이한 힘의 성장(Differential Growth of Power)이 체제상 세력 재분배의 근본적인 이유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동맹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 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강대국 주도의 동맹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기존체제에 대응하는 동맹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력전이이론의 논리 하에서 군사동맹은 비교적 정태적이고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2)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대립

동맹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동맹과 전쟁 발발간의 평면적인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러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사동맹과 그 지속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세력균형가설과 세력전이가설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동맹의 규모(Alliance Size)이며, 두 번째는 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mmitment) 정도이고, 마지막으로 동맹이 구조-대칭적 동맹과 비대칭적 동맹관계 여부이다. 이를 근거로 1815년부터 1991년까지의 군사동맹 201개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⁰⁾. 첫째, 동맹의 규모와 그 지속성의 관계는 동맹 당사자국의 수와 동맹의 지속정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많은 국가가 참여한 동맹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둘째, 동맹의 결속도와 그 지속성의 관계는 비록 상호방위조약이 불가침 협정이나 안보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결속력 여부로 지속성을 판단하기에는 유용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구조와 그 지속성의 관계는 비대칭적 동맹이 강대국간 혹은 약소국 간의 대칭적 동맹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맹국의 수가 많고, 동맹국의 구조가 비대칭적이며, 상대적으로 그 세력 지분이 안정된 동맹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의 결속정도는 다소 영향이 적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 3 절 한미동맹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점은 동맹을 체결하고 유지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익에 반하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과연 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한미동맹은 형성 당시부터 한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미국의 망설임에 의하여 태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물론 동맹을 형성할 당시 미국은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맹이 체결된 후 냉전이 격화되는 기간에는 세계전략에 있어서 한미동맹에 강한 집착을 보인

30) 황영배(1995), 전제논문, pp. 344-351.

측면도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해설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분석한다.

1. 동맹형성 : “행위의 자율성”에 대한 시각

한국전 휴전협상 당시 한국은 한반도를 재분단 시키는 휴전의 대가로 한미동맹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미국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 수립을 망설였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동맹을 형성할 때 이 동맹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주안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행위 자율성의 제한이다. 케넌(George Kennan)에 따르면 현명하고 노련한 지도자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때문에 정부의 행위를 제한할지 모르는 공약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한다.³¹⁾

따라서 국가들은 방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가들이 동맹을 체결할 때 우려하는 네 가지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은 공격적인 국가에게 공격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더 첨가시켜 준다. 팽창을 도모하는 국가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동맹은 적 진영에게 위협을 주고 그들이 반대동맹을 형성하도록 자극한다.³²⁾ 셋째, 몇 국가만이 동맹을 체결함에 따라 중립적인 국가가 적대진영으로 편입되도록 한다. 넷째, 동맹에 참여하게 되면 동맹에 같이 참여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참여한 국가가 무모한 공격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며,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³³⁾

31) George F. Kennan, *The Fateful Alliance, France, Russia and the Coming of the First World War* (New York : Pantheon, 1984), pp. 135-140. ; 예를 들어 미국은 이스라엘과 안보적 측면에서 동맹에 버금가는 협력을 하고 있으나, 아랍국가들에 대하여 행하는 영향력의 제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정식동맹을 형성하지 않았다. Paul R. Viotti &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Security, Economy, Identity*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rentice Hall, 1997), pp. 188-189.

32) 1차 세계대전 당시 3국협상이 3국동맹을 탄생하게 하였고, 1949년 NATO의 결성이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발족하게 하여 서로 대치한 것이 단편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과 같은 약소국과 비대칭적인 동맹을 체결할 경우에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행위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는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행위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자국의 군사적 능력을 동맹국의 영토에 주둔시키는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따라서 강국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약소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그 대가로 군사기지의 확보와 동맹이 제공하는 다른 이득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이익을 투사하는 능력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 약소국은 “행위의 자율성”을 제한 받게 되고,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강대국이 자국에 군대를 주둔하도록 허용, 심지어 요청하게 된다.³⁴⁾

2. 동맹의 한계 : 동맹유지의 제한 요인

일단 동맹이 형성되면 과연 이 동맹이 대내외적인 제한요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미동맹도 양국의 국내적 요인, 한미관계가 기복, 동맹의 주적인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등 동맹을 변화하게 하는 환경적 변화가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동맹을 형성한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도 동맹은 와해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동맹의 제한사항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연구 하였다.

이론적으로 동맹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고 있다. 동맹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동맹은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경우에만 작동되고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동맹은 “독립적 영향력”을 가지지 못

33) Charles W. Kegley &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7th ed. (London: Macmillan Press, 1999), p. 465 ; 케글리 등은 다섯 번째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동맹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의 부정적 측면에서 제외시켰다.

34) Bruce Bueno de Mesquita,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s Pow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Washington D.C.: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pp. 406-407.

하고, 동맹 참여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동맹은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⁵⁾ 동맹은 문서상의 가치 이상을 가지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조치”이며 임시적으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³⁶⁾

동맹에 대한 회의론들에 따르면 동맹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체되거나 포기된다고 한다. 동맹이 해체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동맹 형성 당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또는 공동위협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동맹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이다. 현실주의 학자들은 최선의 동맹은 자신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었을 때 쉽게 해체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하나 또는 전부가 과거에 위협을 받던 적대세력이 더 이상 호전적이지 아니라고 인식할 경우에도 동맹이 약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동맹이 해체되지 않더라도 동맹의 성격은 변화하게 된다.³⁷⁾

둘째, 동맹을 결성할 당시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으나, 동맹참여국이 다른 수단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경우 동맹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동맹은 외부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들이 스스로 그 위협을 대처할 능력이 경쟁국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적이 공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생한다.³⁸⁾

35)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동맹 작동을 통계하여 본 결과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동맹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73%에 달한다고 한다. Alan Sabrosky, "Interstate Alliances: Their Reliability and the Expansion of War", in J. D. Singer (ed.), *The Correlates of WarII : Testing Some Realpolitik Models* (New York : Free Press, 1980), pp. 287-289.

36) Bruce Bueno de Mesquita(2000), *op.cit.*, pp. 408-410.

37) George F. Liska(1962), *op.cit.*, p. 12 ; Grace E. Isui Scarborough and Bruce Bueno de Mesquita, "Threat and Alignment", *International Interaction*, Vol. 14, No.1, pp.85-93 ;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39, No.1, Spring 1997, pp. 158-159.

38) Thomas Christenson &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2, Spring 1990, pp. 95-100.

셋째, 위협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동맹은 더 이상 참여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식될 때 동맹은 쉽게 붕괴되게 된다. 첫째, 물질적 능력의 부족으로 느끼는 동맹에 대한 회의론이다. 특히 동맹의 추가적인 군사력 보충이 없게 되면 약소국은 적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거나 중립의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둘째, 파트너 국가가 진실로 안보적 지원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동맹은 약화 또는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문제는 동맹국들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일국의 위협이 타국에게는 위협이 아닐 경우, 또는 동맹국간의 국력 또는 군사력의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약소국은 자국이 강대국 파트너에게 안보적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결국 피침시 포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³⁹⁾

넷째, 국내정치적으로 일부 정치적 세력이 동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동맹은 와해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맹이 일부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고, 국가주권을 훼손한다고 인식될 경우 동맹은 공격을 받는다. 이 경우 동맹을 파기함으로써 소요되는 안보비용 보다 국내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⁴⁰⁾

3. 동맹의 발전 : 유지 요인

동맹이 대내외적인 이유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으나 한번 체결된 동맹은 쉽게 와해되지 않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앞 절에서 제시한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나타났으나, 한미동맹의 결속성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양국이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동맹을 해체함으로써 획득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대한민국

39) Stephen M. Walt(1991), op.cit., p. 160.

40) 월트는 1967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나토의 공동 군사사령부에서 탈퇴한 것, 1985-96년 뉴질랜드 좌파정치인들이 미국 전함이 뉴질랜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여 ANZUS조약을 훼손시킨 점, 1992년 국내압력으로 필리핀이 미군으로 하여금 수빅만에서 철수하도록 한 점을 대표적 예로 지적하였다. Ibid, p. 161.

국 수호라는 동맹체결의 목표가 변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결속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동맹이 계속될 수 있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권적 리더쉽(hegemonic leadership)”에 의하여 동맹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동맹내부의 강대국들은 동맹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동맹을 파괴하거나 이탈하려는 국가를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동맹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하여 부담하거나, 동맹을 보다 매력적으로 하기 위하여 물자를 제공하거나, 이탈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응징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패권적 리더쉽에 의한 동맹유지는 쌍무동맹인 경우 더 효과적이다. 이는 강대국이 동맹의 유지를 원하고 약소국이 동맹을 파괴하거나 이탈하려 할 경우이다.⁴¹⁾

둘째, 동맹을 해체할 경우 “신뢰성(credibility)”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동맹국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경우 동맹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과 여러 종류의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어느 하나의 동맹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의 동맹을 포기하면 다른 동맹국들이 그 국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되고 적대세력도 그 국가의 타국에 대한 개입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동맹이 원래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지역에서의 개입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동맹을 유지시킨다.⁴²⁾

셋째, 동맹이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되었을 때 외부위협이 변화하더라도 동맹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도화”는 군사계획, 무기구입, 위기관리 등 동맹에 관련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공식적 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동맹국들이 집단적 결정을 하는 공식 또는 비공식 규정의 존재를 의미한다.⁴³⁾

넷째, 동맹참여국들의 “이념적 결속(ideological solidarity)”도 동맹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두 개의 독립국가가 공통된 정치적 가치와

41) Stephen M. Walt(1991), op.cit, pp. 164-165.

42) Ibid, p. 165.

43) Ibid, pp. 166-168.

목적을 보유할 때 이념적 결속이 존재한다. 국가들은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유사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그들이 서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그들 고유의 이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결속은 동맹내부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향한 공약은 동맹의 근본적 이유가 사라지더라도 동맹이 장기간 유지하도록 한다.⁴⁴⁾



44) 1953년 한국전 휴전협상이 진행될 당시 이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미국이 압력과 설득을 되풀이하자 이승만은 휴전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작전(Everready Operation)”의 입안과 수행을 검토까지 하였다.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 서울대출판부, 2000), pp. 526-548.

제 3 장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제 1 절 국제질서의 변화

1. 신 국제질서의 특징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제 사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국제질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미·소를 축으로 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동서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으로 다극화 현상이 대두되어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정치·외교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 국제질서라는 개념은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부터 산물인 알타체제에서 화해와 협력에 기반을 둔 몰타체제의 대체질서라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질서는 매우 유동적이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어 세계도처에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수용한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은 심각한 사회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공산주의로의 회귀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민족주의 분출, 종교적 갈등, 국가 간의 무역 분쟁, 자원고갈문제, 환경, 마약, 국경분쟁 및 핵무기 확산 등의 문제는 신 국제질서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요소들과 끊임없는 군비경쟁,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모순이 가져다준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은 신 국제질서도 변화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신 국제질서를 특징 지우는 것은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써 세계질서 재편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우·적의 개념이 없어져서 오직 국익만이 존재하는 냉엄한 환경이 조성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국제적인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양대 세력의 어느 일방에 속함으로써 이념을 공유하고 후견세력

의 지원과 감시를 동시에 받고 있던 약소국들이 탈냉전으로 후견세력이 없어짐에 따라 행동반경이 커지고 인접국간에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개입을 꺼리고 있어 이 같은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이슬람 국가 간의 충돌, 세계적인 무역 분쟁의 확산 등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⁴⁵⁾

첫째는 이데올로기의 퇴조를 들 수 있다. 리차드 로즈크렌스(Richard Rosecrance)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 군사적 세계관의 퇴조로 인식하고 교역의 세계관이 앞으로의 국제질서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관계에서 한반도에서처럼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교역을 통한 경제 성장의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데올로기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국제관계가 철저한 국가 이익에 입각한 국가 간 타협과 협상이 기본 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힘의 원천과 헤게모니 개념의 변화이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크게 체계적 변화와 권력배분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변화를 들면서, 체계적 변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원천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변화하며, 권력배분의 변화는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감소와 일본 경제력의 부상을 들고 있다.

셋째는 분열과 통합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민족주의, 인종, 종교, 문화 등에 의해 분열을 더해 가는 한편, 경제, 교역, 정치, 군사 등의 요인으로 지역 및 세계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이중성은 더 팽배해질 것이다. 경제와 교역을 목표로 하여 NAFTA, APEC 등이 기존의 지역주의에 더하여 경제 협력체제로 연대감을 과시하고 있고, 중화경제권, 중남미 경제권 등이 새로운 협력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은 단일경제

45) 이청현 외, 『신 국제질서와 남북한』, (전남 : 조선대학교, 1998), pp. 6-15.

체제를 기반으로 정치 단일체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넷째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변화된 국제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의 심화이다.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는 다른 국가와 별개의 범주에서 독자적인 국제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의미로써 국제관계가 하나의 정치·경제관계로 상호 의존됨을 말한다. 이는 한나라의 공동체 속으로 파고드는 외국의 행위자와 매체들이 자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늘어남으로써 국가 주권이 약화되며 자국민이 외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는데 따른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의 모호성이다. 신 국제질서에서는 어떤 쟁점이 우선 인지를 가려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과거에는 국가안보 이슈가 다른 어떤 쟁점보다도 최우선의 비중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비군사적인 쟁점들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들 쟁점이 안보 위협 요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하에서는 전쟁의 양상 등 미래의 위협환경에 대한 전망이 비교적 예측 가능했다. 왜냐하면 양극체제하에서는 군사동맹의 비대칭성이 분명했고 전략 핵 중심의 임전태세를 관찰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국제질서 하에서는 갈등, 분쟁 및 다양한 위협요소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서 위협요소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국제질서 하에서는 갈등, 분쟁 및 다양한 위협요소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서 위협요소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국제질서에서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 쟁점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쟁점영역의 역동성 및 문제해결 절차가 독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간의 문제에서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맹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경제를 포함한 여타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상호간이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는 국내 문제 우선과 민주주의 보편화 경향이다. 국제 정세 변화 속

에서 국제적인 문제나 관심의 쟁점이 분화되고 강대국 간의 전쟁가능성이 희박해 짐으로써 각국은 국내문제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기존의 안보 중심적 동맹관계가 다양한 국익 추구를 위한 동맹관계로 영역이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유일 강대국 추구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양상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으로 표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신 국제질서의 특징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정책과 한·미간의 제한된 관계에서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와 흐름에는 부합된다고 하겠다.

2. 신 국제질서의 전망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지켜나가는 국제 체제에서 어떤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자와 전략가들 사이에서 여러 다른 견해와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의 신 국제질서의 구조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신 국제질서의 특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주장한 미국의 쇠퇴론 보다는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반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팅톤은 미국경제력의 상대적인 비중약화는 인정하면서도 군사·경제적으로 국제질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며, 미국의 주도아래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의 6개국이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국제질서를 주도·유지하며 제 3세계의 분쟁에 대응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이 다른 강대국들보다 포괄적인 힘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 단일국가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패권질서의 형성까지 연결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 같은 주장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신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⁶⁾

첫째는 일국 패권주의 체계이다. 이 체계의 특징은 초강대국에 의해 국제 질서가 관장 통제되는 것으로 한 국가의 힘과 의지로 국제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패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힘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 여건에서 패권국가로 미국을 지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일국 패권체계를 상정 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실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내부에서 패권적 지위의 위치를 선호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걸프전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과거에 비해 군사력의 효용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관계의 중요안건들이 군사적 쟁점에서 비군사적 쟁점으로 옮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군사력의 적용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에서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의 인종, 종교, 환경 및 무력분쟁 등의 해결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미국에 의한 일국 패권체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의 전략구도와 군사력의 효용성에 대한 한계에 의해 그 실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다수의 국가군에 의한 다원적 체계이다. 다원적 국제질서체계는 초강대국이나 단일의 주도국가가 없이 대등한 여러 강대국들이 정책적 합의나 조절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 간 연합을 형성하여 협력해 나가는 국제질서를 의미한다. 이는 3개국 이상의 강대국들을 위주로 형성되는 국제질서로 강대국 간의 변화무쌍한 경쟁과 협조관계가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되며 여타의 중급 및 약소국들은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장래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경찰국가로써 그리고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과 투자체제를 이끌만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미국, 유럽공동체와 일본이 3각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경우로써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걸프전에서처럼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이 경제적 협조뿐만 아니라 군사

46) 이청현 외(1998), 전개서, pp. 18-22.

안보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 간에 협조가 퇴색한 상황에 처할 경우로써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면서 분쟁이 발생할 때는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체제는 역사적인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통한 협조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단·다극체계이다. 단·다극체계(Uni-Multipolar System)는 패권적 체계와 다극의 융합형태로써 초강대국이 우월한 힘을 가지고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되, 그 밑에 다수의 강대국이 포진하여 이들의 협력과 지원을 토대로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형식을 갖춘다.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 정치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화된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이다. 이 같은 사례는 걸프전의 수행과정에서 잘 나타났으며 국제관계에서 힘의 원천변화를 놓고 볼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제체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특징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구분할 때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중국, 몽고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가리키며 이 지역의 국제질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국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게 된다. 2000년대 초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 국제질서는 이들 4대 강국간의 이해관계와 상호대립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소련이 와해된 이후 미·소간, 중·소간 혹은 일·소간의 대립이 해소된 반면에 미·중간, 일·중간의 신 방위협력 지침, 미국의 MD문제 등으로 인한 미·일·중간의 갈등과 미국의 정찰기 공중 충돌사건을 계기로 보여줬던 미·중간의 심각한 대립, 일본열도의 영토문제로 인한 일·러 간의 마찰 등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과 유동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기는 물론이고 탈냉전기에 들어와서도 미·중·러·일 4강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복잡한 지역이다. 4강의 세력구조는 바로 정치·지리적 구조의 함수이며 이러한 지리적 구조의 특성과 힘의 균형이 지역의 안정과 분쟁을 가름하고 있다.⁴⁷⁾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은 20세기에 종식되었으나 동북아에서는 냉전의 정치적, 군사적, 영토적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신 국제질서 하에서도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냉전시기에 존속했던 동맹관계를 복원시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적인 동반자 관계를 재선언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체제를 장기적으로 존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략 구조상 동북아지역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비증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의 상존하는 갈등과 대립을 각 국가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증강시킨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더 큰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선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각국의 군비증강은 결국 상호 오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내의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인식은 각국이 안보딜레마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지나친 군비경쟁이 더 큰 분쟁을 낳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⁴⁹⁾ 이 역내에서 각국의 정책과 안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대 경제지역이 갖는 성격을 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경제의 30%이상을 포용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이 지역과의 교류와 통상이 그들의 국익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률과 경제 우선 정책은 세계무역중심이 대

47) 김형남, “동북아 4강의 군사정책에 관한 지정학적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원, 1984), pp. 1-2.

48) 이춘근, 『미국의 신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세종연구소, 2000), p. 89.

49) 홍규덕, “한미동맹의 미래와 주변국의 입장”, 『국방연구 43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2), p. 93.

서양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면서도 강한 경제민족주의 영향 탓에 EU나 NAFTA와 같은 경제적인 지역 공동체를 가지지 못한 것은 갈등과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으며 문제해결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관심은 군사안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이익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적 변형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안보 공약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망

21세기 들어서서 국제질서는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과 함께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냉전종식 후 1990년대를 유지해왔던 국제사회의 모습은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동북아의 신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안보환경의 구조적인 다극화 양상이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북한, 중국, 구소련의 북방 삼각관계와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관계의 대결구도와 세력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양극체제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영향쇠퇴와 일본과 중국의 역할증대 따라 구조적인 다극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의 질서 및 안보환경을 다극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1년에 들어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간의 관계정상화는 냉전시대보다는 느슨한 신 삼각관계 형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우선 정책에 따라 냉전시대와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역할의 약화현상이다. 이는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코스보 사태의 해결방법으로 유엔의 승인보다는 NATO 국가 간의 지지와 협조를 통하여 세르비아 폭격을 수

행하였으며, MD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강대국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무시해 왔으며 군사적인 개입과 강압이 국제질서의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구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경제 우선 정책 및 미국의 전략에 따라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일시적인 국제질서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21세기 들어서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역할이 커지면서 안보환경에 있어서 전통적인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에 우리와 미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 분쟁 및 어업문제에서 나타났듯이 경제문제가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 언제든지 발전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있어서 상호 양보하기도 어려운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동북아 지역의 탈냉전 진전과 냉전적 대결 잔존에 따른 딜레마이다. 동북아지역은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곳으로 현재에도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은 탈냉전이후에도 역내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인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내재해 있다. 그 이유는 냉전의 유산인 남북분단의 지속과 갈등, 중국과 대만의 영토문제, 중국의 역내패권 추구, 일본의 재무장 추구 등 냉전적 사고와 군사적 경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MD 추진에 따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공동대응은 새로운 대결구도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불안정한 군사안보 구조이다. 구소련의 와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안보구조에서 한 축을 차지하던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우선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장차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강대국을 추구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역할 변화를 도모하

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 안보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각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냉전시대에 구소련을 견제하고 역내 세력균형을 유리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을 활용하였으나 냉전구조의 해체이후 오히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으며 일본과는 신 아·태 전략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관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군사안보구조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상태로 매우 불안정한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3 절 주변국의 정세변화와 전망

신 국제질서 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 4강 중 미국의 정세변화와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동북아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⁰⁾

먼저 중국은 소련 붕괴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견제와 동시에 지역패권을 확보한다는 구도 하에서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와 안정구축,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추진,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 방위외교 추진의 거점 확보 등을 동북아 정책의 기본 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 대외 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에 기초한 대외 관계보다 상호간의 이익존재 여부에 대외관계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 방위적 평화공존외교’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권장하면서,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유발 가능성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

50) 김구섭, “국제문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한국국방연구원(2001), pp. 27-31.

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국경문제를 포함한 안보협력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일본과의 정치·경제협력의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과거 갈등관계에 있던 주변국인 인도·베트남 등과의 국교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의 제재정책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아시아 중심의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보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중시하여 왔으나, 아·태 지역의 경제 성장, 서방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부진, 천안문 사태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지역별 경제 블록화 현상 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 권’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 있어서는 동북아의 신 국제질서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통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패권정책을 억제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의 부상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안보강화, 자원 및 시장 확보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데 국가 이익을 두고 아·태 지역으로까지의 안보역할 증대와 잠재력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그리고 아·태 지역 경제 주도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의 지위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냉전기에 구소련의 동북아시아 지역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을 여전히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1972년 외교 정상화 및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역강국으로서의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지나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체제유지, 방위력 증가 및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

본의 정책은 지역방위전략과 해안안보정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성립시킨 후,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소말리아, 골란고원 등에서 유엔의 평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 방위 경제외교,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사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등 포괄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동북아정책은 안보차원에서의 미·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내 신보수주의 대두,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본은 한층 더 국제 정치적 위상을 높이면서 역내에서의 패권을 추구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국가이익을 아·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경제적인 측면에 두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적 차원에서 구 소련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전략 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중국의 반러화 방지, 다자간 안보 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국가들,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의 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한 중국·북한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페레스 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적 요건조성이라는 국내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바탕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에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 및 외교노선은 구소련이 확보하고 있던 위력을 회복하여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신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려는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외교노선이 대내적 사회분열, 정치적 불안의 연속, 그리고 경제개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대내정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문제이므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대외정책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충돌해야 하는 등의 다소의 국제정치적인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외교노선을 당분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 관계 분석

제 1 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동북아 의미

미·소간의 이념적인 냉전갈등이 소련의 자체적인 변화움직임인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운동, 고르바초프의 개혁운동과 미국의 대내사정 경제침체, 군사비 감축정책 등에 의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베트남, 중국, 쿠바, 북한 등의 '개혁사회주의'로의 변화움직임은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되는 결정적인 구실과 지위격상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도 동북아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냉전시대 동북아는 지형적인 면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중요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일본·미국이 교차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가져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의 화해정책과 1980년대 소련과 미국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을 통한 평화정책은 그 동안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조 그리고 상호공존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 시기 이후에도 확산정책(The Enlargement Policy)과 개입정책(The Engagement Policy)을 통하여 미국의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한다. 1992년 2월 부시행정부에서 마련된 국방지침에는 향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우리의 첫째 목표는 구소연방 지역이나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과거에 소련이 제기했던 것과 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적대적 세력이 세계적 강국을 배양할 만한 자원을 가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것은 곧 미국이 기본적으로는 냉전시대에 확립된 군사적 우월성을 계속 지탱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패권정책에 있어 동북아는 결코 양

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태평양 연안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소봉쇄(對蘇封鎖)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일본을 편입시켰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 균형의 유지를 기본목표로 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 등 전세계적 차원의 안보환경 변화와 재정·무역적자 등 국내경제적 요인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봉쇄정책을 지역적 안보전략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위한 정책도 다소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①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②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속에서의 미·일협력 체제 ③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④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전략 핵 중심의 핵우산정책 유지 등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한 것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다.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의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기간(1998.11.20~23) 중 미국 국방부는 1998년 11월 23일 일명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로 알려진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United States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을 발표하였다. 이는 냉전종식을 전후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 1992년, 1995년에 이어 네번째로 3년여만에 새로 만들어진 동아태 전략보고서로서 아·태지역 주둔 미군을 10만명 선에서 유지한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발간 이유에 대해 "이 지역 각국이 지역평화와 안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이 안보공약 준수의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후 취해진 이같은 일련의 EASR 발표는 우방국들에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 안심시키는 반면 적대적 국가들의 오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주요개념은 미국방부의 중·장기 아태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Engagement)전략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양자 차원의 안보동맹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다자차원의 안보노력을 병행하고,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틀에도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포괄적 개입전략을 '미군주둔 플러스'(Presence Plus)로 명명하고 있다. 미군이 단지 주둔하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자·다자차원의 안정노력과 정치·경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높여간다는 뜻이다. 또한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건설로 요약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개입전략이 아·태 전략의 기본축임을 역설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금번 보고서는 탈냉전시대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동아·태지역에도 적용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국은 재정·무역적자로 인한 미국내 국방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비용분담 측면에서 한·일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핵억지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역내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절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분석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역내의 안보환경이 냉전시대에 비해 크게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역할을 미·일 동맹에 의한 미국의 협조 국가이면서도 독자적인 정치·군사적인 강대국 추구를 제한해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매우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잠정적으로 미국은 힘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정 군사력의 유지와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미국이 세계질서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적 차원에서는 동맹 강화 강화정책을 통해 선택적 세계지도력(selective global leadership)을 구축·발휘하여 적대적 경쟁국가나 동맹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는 지역의 안정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 현존 쌍무적 동맹을 재확인하고 결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 스스로도 강력하고 정예화 된 군사력을 주둔시켜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강국의 패권주의 추구하고 패권국가화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힘의 우세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권 장악에 주력할 미국은 외교와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상대국과의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힘의 우의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군사력 자체가 중요한 협상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정예화 된 군사력을 주둔시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은 “일본은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포위”하는 전략이며, 중국과 충돌에 대비하여 아시아 주둔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극동아시아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혈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일 관계는 군사관계에서 더욱 밀착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미·일 양국이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방위계획 대강” 개정과 양국의 장기 군사전략 설정을 목표로 새로운 협의체의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가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에서도 미·일간의 밀착된 군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이 개정되면 지난 1995년 마련된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 이후 증대되어온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팽창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핵심은 “對中 포위전략”이다.⁵¹⁾ 미국은 중국과 인도·러시아 등의 세 나라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패권을 행사하거나 이들이 연합하여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21세기에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기본 틀” 역시도 중국을 잠재적국으로 가정해서 군비태세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4가지 골격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국 국방정책의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며,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의식하여 유럽·대서양 쪽에 실려 있던 전략의 무게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향후에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는 대신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향상시킨 신속배치전략(Rapid Deployment Forces)을 구상하여, 분쟁지역에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군사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1. 對 중국 전략

21세기 들어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중

51) 김구섭(2001), 전계논문, p. 29.

심국가로서 중국의 재등장은 역내의 질서와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시작된 “덩샤오핑(鄧小平)개혁” 이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계 어느 국가도 쉽게 다룰 수 없는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세계최대 인구 보유국, 핵전력 보유국, 지역군사강대국, 유엔 상임이사국 등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의 미·중관계와 미국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담당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성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기보다는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하였으며 포괄적 개입으로 상화관계를 안보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물에 맞게 활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로 변화하는데 최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천안문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각종 인권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미·중 관계는 협조와 갈등의 이중적인 구조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를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함과 동시에 지역 패권을 확보한다는 구도 하에서 현재의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념과 체제에 기초한 대외 관계 보다는 주변국가의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국가 상호간의 이익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 방위적 평화공존외교의 일환으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권장하면서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유발 가능한 세력을 현상유지 세력으로 끌어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혁, 개방정책 초기에 서방 선진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시 하였으나,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 천안문 사태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지역별 경제 블록화 현상 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경제 협력권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동북아의 신 국제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 대국을 이룸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주도국가로 부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미국의 중국관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잠재력은 미국의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학자 네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앞으로 50년간 가장 주목할 만한 세계적 현상을 ‘아시아의 근대화’라고 못 박고 있으며 “세계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동남아를 포함한 중화권의 부상을 예언하고 있다.⁵²⁾

나이(Joseph S. Nye)는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역량과 군사력은 21세기 초반 미국의 아·태 지역 정책의 중심 과제라 선언하면서 중국은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나이는 중국이 앞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형 발전’ 전략을 택하리라 내다보고 미국이 중국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은 묵과하고 공통이익을 앞세워 협력해 나가면서 중국이 점차로 국제적 책임을 더 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⁵³⁾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세계 무역 및 금융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경제적 개입과 중국이 호전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통한 안보개입의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펴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개입은 당근에 해당하고 안보적 개입은 채찍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2) 이상우,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8), p. 11.

53) 김구섭(2001), 전개논문, p. 76

“정치적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대를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자세를 볼 때 중국은 계속 전체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신 국제질서에 편입되려 하지 않을 것임.”

또한 미국은 냉전시대의 구소련이 태평양으로 남하와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봉쇄하였던 것과 같이 동남아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신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활용한 중국 봉쇄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및 파키스탄에 이르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신 안보벨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은 동아시아에서 지배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과 상반될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중국의 능력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는 고립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역내의 안보상황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마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불량 국가들의 오판과 실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반달형 중국 봉쇄 정책”에 맞서 돌파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중국 간에는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우선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미국과의 대결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중국을 연간 8백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의 접근 필요성과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방지와 여타의 한반도 문제 등에서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갈등은 피하려 할 것이다. 21세기 초의 역내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큰 틀 속에서 잠정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게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개조를 서두르지 않으면서 ‘조건부 개입(Conditional Engagement)’이라는 현실 수용적인 접근을 통해 분쟁을 야기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현재보다 나은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국과의 직접충돌은 피하려할 것이므로 비제도화된 상태 하에서 안정질서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對 일본 전략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는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서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준 영구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두 국가는 상호적 이익과 함께 같은 이념을 추구한다는 상응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 동맹에 비교할 정도로 튼튼한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미·일 동맹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은 초기에는 미국의 일본방위와 일본의 미국정책 지도 수용이라는 비대칭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국력이 신장되어 강대국 수준에 오른 1970년 말에는 대 소련의 공동방위동맹을 통해 대등한 동맹으로 발전하였고 냉전종식으로 구소련의 위협에 사라진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되었다. 냉전시대의 동맹관계를 규정했던 1970년 11월 27일 「미·일 방위 협력지침」을 개정하여 1997년 9월 23일에 「신 방위 협력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21세기 초의 미·일 동맹의 기본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자위능력 유지와 미국의 핵 억제력 제공을 근간으로 일본을 방위한다는 기본골격은 이전과 같으나, 공동방위 범위를 극동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장하고 협력내용을 일본 자위대의 일본영역 밖에서의 소해작전, 민간인 소개 작전, 미국작전지원 등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이상적인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대국인 일본을 동맹으로 묶고 있음으로써 많은 힘을 투입하지 않고도 역내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일본이 가장 이상적인 동맹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이 동맹조건으로 삼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경제적 이익, 이념적 상응성 및 자립능력의 네 가지 기준⁵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미국의 대 동북아 안보전략 면에서

54) Robert A. Scalapino 교수가 1975년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관해 제시한 미국의 동맹국 선정 기준 ① Strategic importance ② Economic interest ③ Ideological compatibility ④ Viability

아주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이들 나라들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을 동맹으로 함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유리할 수가 없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단독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현대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보편적인 전투력을 제공받음으로써 미·일 동맹을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교류와 교역량은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협력 국가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이념과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적인 자립능력을 완전히 갖춘 나라이다.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도 일본에게 가장 소중한 협력 대상국이다. 일본은 미국이 허용하는 미국시장을 발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현재에도 대미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1세기 초 상당기간을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극동에서의 대 중국과 대 러시아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질서와 안정유지를 위해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 對 러시아 전략

구소련 연방해체 이후 러시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엄청난 정치적인 변혁과 경제적인 몰락을 경험하였으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해체라는 혁명적인 체제 전환의 와중에서 러시아는 강력한 대외정책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으나 푸틴 집권이후 신 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양극체제를 주도하였던 냉전시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막강한 군사력과 영토와 자원 등의 엄청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다극체제의 신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방해체 후 러시아는 출범 초기의 서방 중심의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 유대를 최우선으로 삼고 서방국가들과는 자국의 국익과 관련해 사안별로 선택적인 협력 및 견제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적극적인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과 대외협력, 국제적으로는 역할과 위상 제고 등의 정책 목표를 추진해 오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아·태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경제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목표는 역내 신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적극 동참 주도,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중국의 반러화 방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역내 군축의 실현, 다자간 안보협의 기구를 창설하는데 두고 있다.

러시아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국 국경지역 안정화를 위해 아무르 강 삼각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국경지역 신뢰구축 협정 및 국경병력 감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경문제의 완전타결 기반을 마련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성이라는 국내 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 기구와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산적한 국내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정치 우선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 양국관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국의 MD추진에 대한 중국, 북한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제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친 서방주의적인 세력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은 지속 할 것이나, 군사 안보적인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필적하는 세력으로의 부상은 막으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국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서방과의 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미국의 NATO 확대정책과 미·일 안보동맹 강화현상에 대응하여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확립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⁵⁾ 러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재정립 움직임과 더불어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55) 이상우(1998), 전계서, p. 978.

4. 對 한반도 전략

미국의 아·태 전략에 의하면 한반도에 대한 최우선적인 정책과 고려는 북한이 남침시 한·미 연합군이 이를 격퇴시키는데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남북한에게 공히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며 특히 수도 서울의 피해와 공황발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에 대하여 전쟁도발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시대의 미국의 對 한반도 전략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는 세계전략과 일본 및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의 부활을 억제하는 지역균형의 달성과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시키는 역할수행을 통한 국지적 억제(Local Deterrence)의 달성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 했었다. 그리고 對 한반도 정책에서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해 온 목표중의 하나는 일본의 방위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방위와 냉전시대에는 구소련의 봉쇄전략을 위하여, 현재에는 對 중국의 봉쇄전략의 일환으로서 전략적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유지와 아시아 전략의 초석이 되는 일본과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역내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라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적 현안에 있어서 잦은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방법과 시기 및 주도권 문제 등이 주된 갈등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에 입각한 공격적인 핵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핵무기 감축과 동시에 보다 방어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비확산과 반확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략적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불량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의한 안보전략으로 대처한다

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전략의 대표적인 위협국가로 북한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시화 될수록 대미협상에 서의 유리한 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한국과는 대북 포용정책의 수준과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문제 및 대북 전략의 주도 등에 있어서 갈등과 수용이 반복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과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한국과의 전략적인 접근문제 등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정책변화의 검토기준이 될 만한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의 강조 외에도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게 제네바 핵 합의의 철저한 준수와 미사일 제조 및 판매의 완전한 해결과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 포기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적절한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금융기관 차관지원의 세 가지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에 의한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포괄적 상호주의를 언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하여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제 3 절 한미동맹 형성과정과 성격변화 분석

1. 한미동맹의 형성배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필요성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동맹의 결성을 주장했다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1949년 6월 철군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 한국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극동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한국에 대한 파병결정을 신속하게 내렸으며, 6.25 종전과 함께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조인하고 1954년 11월 발효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거기에 근거해서 한미동맹이 탄생하게 되었고 벌써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출범 당시 한미 동맹 형성의 주요 원인⁵⁶⁾은 한국 측에서 보면

첫째, 한국은 북한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을 통해 미국의 억지력과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위협 억지와 방어가 가장 큰 이유였다.

둘째, 한국전쟁으로 인한 잿더미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지원이 필요했다.

셋째, 미국의 안보보장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국가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전력투구하고자 했다.

넷째, 한국 정치의 정통성 부족을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빌어 보충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때 강대국의 힘을 빌려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군사적 이유 이외에 국력 일반의 부족분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동맹결성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동맹형성의 원인을 미국 측에서 보면 첫째, 미국은 동북아에서 힘의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미국의 영향 하에 놓을 뿐 아니라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한국과의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를 원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막을 수 있었고, 한반도 불안정 원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전략적 및 군사적 이유에서 미국은 싼 비용으로 최전선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에서 우세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출범 시부터 1970년대 말까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경제·군사원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정치·군사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 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절대적 필요성에 국민적 합의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한국 안보의 통제자로서 미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시작된 탈냉전과 미·소 군축협상의 진전에 따른 세계적 긴장완화 분위기의 확산 및 유럽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의 성공, 독일 통일 이후 주독일 미

56) 한용섭, “신정부의 한미동맹 관계 정립방안”,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 5.

군의 규모 축소 등에 부응하여 미국은 안보전략과 해외 주둔군 정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 의회는 미국의 해외개입전략을 대폭 수정할 뿐 아니라 유럽주둔 미군병력의 감축과 함께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의 규모를 재평가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1989년 8월 년·워너 법안의 통과와 1990년 4월에 21세기를 향한 동아시아 전략구상으로 나타났다.

동 전략구상에 의하면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을 1990년부터 3단계로 감축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미국의 국익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당시로서는 한국의 국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서서히 한미동맹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1] 년·워너안에 따른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

구 분	병 력 감 축	휴전협정 관리체제	연합 지휘체제
제1단계 (’90~’92)	- 육군 : 5,000 명 - 공군 : 1,987 명	- 군정위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 보임 - JSA(판문점) 한국 경비병 증가	- CFA 해체 - GCC 분리/한국군 사령관 임명 - 작통권 환원 검토
제2단계 (’93~’95)	- 감축완료시 미 2사단 2개 여단, 7공군 1개 전투비행단 규모로 재편 ※ 북한 핵개발 연계로 보류	JSA(판문점)경비 임무 한국이 인수	- CFC 해체 - GCC 분리/한국군 사령관 임명 - 작통권환원 검토
제3단계 (’96~)	북한의 위협정도, 억제개념, 미군의 지역 역할에 따라 주둔규모 결정 (최소규모 장기체류)	미 2사단 책임지역 인수	- 전시작통권 환원 - 한·미 기획사령부 정착 - 한·미 병렬체제 발전 ※ 용산기지 이전

출처 : 한용섭(2003), 전개논문, p. 8.

즉,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의 안보의존에 의한 군사동맹위주의 동맹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동맹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좌우되어 왔었다. 특히, 지나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의 결과 한국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자치·안보 교환적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해 1990년대까지는 한국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적이었던 반면에 문민정부의 등장과 군사문제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가 증가됨에 따라 한미군사관계의 평등성과 한국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2002년 11월에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50%를 넘게 되어 한미동맹 위기론까지 대두되어었다.⁵⁷⁾ 게다가 북한문제, 중국에 대한 한미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여 주었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안정에 기여한바가 컸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안보전략에 의해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향후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강력하게 도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지속적인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이나 주변전략여건이 달라진 만큼 한국의 역할증대와 한반도 이외지역에서도 한미동맹의 역할이 수행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 동맹은 지난 1990년대까지와는 달리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와 한국과 미국내 여론에 의해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나 성격은 변화되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동맹 성격과 역할

57) 이내영·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p. 70.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전쟁에 따른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휴전의 대가로서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하였다. 미국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침략의도를 억제하면서 현상유지를 원하였으며 한국은 조약을 통하여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 따라 3년 동안의 전시동맹관계를 갖고 있던 한국과 미국은 휴전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역사적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출발되었던 것이다.⁵⁸⁾ 먼저 한·미 동맹의 발전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보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⁵⁹⁾

첫째는 상호방위조약체결 이후부터 5. 16군사혁명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선 시기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육군 2개 사단과 공군 1개 사단 및 각종지원 부대 등 6만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민정이양을 요구하고 군사원조 및 경제 원조를 한국의 민주상황과 연계하여 압력을 가했던 시기로 불평등한 동맹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미국에 안보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대신 미국의 지지를 통하여 각종 특혜와 원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1965년 4월 미국의 베트남 파병이후부터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시기까지이다. 이시기에는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는 미국을 상대로 최상의 협상위치를 확보하면서 각종 군사지원과 경제 원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투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를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1년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을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양국간의 오해와 마찰이 심한 시기이기도 하다.

셋째는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겠다고 발표한때부터 1980년 초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한미 동맹관계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시기로 카터의 이상주의적 정책, 미국 맹방(盟邦)들의 신뢰상실, 철군결정, 유보, 수정 등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관계가 매우 악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8) 김계동,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개선방안”, 『사상과 정책』, (서울 : 오름, 1998), pp. 122-123.

59) 홍규덕(2002), 전계논문, pp. 47-78.

넷째는 1980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경제와 문화교류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던 때였다. 특히 경제면에서 군원이 중단되고, 무기의 국산화와 면허생산이 시작되었으며 피보호의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다섯째 1993년 문민정부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들 수 있다. 이시기는 한미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 차별성을 들 수 있으나 대북 접근 방식과 전제조건에 있어서 한미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군사면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노정 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성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전통적인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힘의 차이가 동맹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강대국인 미국은 물리적 제재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하여 언제든지 동맹국의 선택과 행동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다음은 종속주의적인 시각으로 국력의 차이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써 약소국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시각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향은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발전과정 중 최근에 가까울수록 미국을 상대로 종속적인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더욱 많은 요구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에서 강대국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그만큼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게 되고, 피보호국은 동맹국에 자신의 소용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 만큼 보호를 받고 또한 자기와 충성심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은 성립단계와 발전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시각이 혼재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략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의 인정에 기초하여 성립된 관계로 파악하고 일반적이기 보다는 상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전략

동맹이란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는 결성체이다. 한미양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고찰은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전략목표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된다.

MB 정부는 국정철학⁶⁰⁾에서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적 장기비전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설정하였다. 한국의 역사를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거친 발전의 역사로 인식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구 온난화 등 지구적 문제의 부상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인간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 등 문명사적 전환기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코리아를 목표로 새로운 평화창출, 실용적 통상외교, 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그리고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를 제시한 바 있다.⁶¹⁾

한편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2006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⁶²⁾에서 자유, 정의와 인간 존엄성 증진,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을 전략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안보정책 과제으로써 대테러 동맹 강화, 미국·동맹국·우방국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차단,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범세계적 중심 국가들과의 협력 의제 개발, 미국의 국가안보체제를 21세기 도전에 부응하는 체제로 변혁, 기회의 적극 활용 및 세계화로 인한 도전 극복 등을 통해 전략기조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국가전략을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 확산시키면서, 자유무역, 에너지 자원외교 등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 기아, 분쟁 등 실패한 국가에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며, WMD 반확산, PKO 파병확대 등 국제평화 유지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을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의 공통분모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60) 청와대, “국정철학”,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 2009. 7. 30)

61) 매일경제인수위취재팀, 『MB노믹스 액션플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8), pp. 265-272.

62)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rch 2006. pp. 200-210.

4. 포괄적 안보평가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은 동맹의 존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의미는 크다.⁶³⁾ 사실상 불편했던 한미관계는 북한 위협, 특히 북핵 관련 인식의 갭에 따른 상이한 대북정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기술이 국제테러리스트를 넘어갈 경우, 미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으로 평가하여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리가 있다.”⁶⁴⁾는 시각은 미국의 위협인식과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1) 북한 위협평가 및 한국의 전쟁수행능력 평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현존위협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3년 후인 2012년 북한의 위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한미 국방부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북한군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체계 중심의 군사력 평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군의 장비 노후화를 포함하여 재래식 무기와 WMD 및 미사일 위협, 유류·식량·탄약을 포함한 전쟁지속능력, 도로망·항만·비행장을 포함하여 인프라 등 유형전력외에도 북한군의 전투의지, 훈련수준, 사기 등 무형전력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북한 주민의 정치 사상적 이완실태 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지작전통제권 전환 예정인 향후 3년 후, 북한의 총체적인 안보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핵 전망을 포함하여

63) Walt는 위협, 이데올로기, 대외지원, 교류 등의 요소가 동맹을 결성하고 존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구소련의 공동 위협으로 출범한 NATO가 구소련과 와르샤바조약기구(WTO)가 해체된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Walt의 이론으로 해설할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NATO에 대한 사례연구는 시사점이 크다. Stephen M. Walt(1987), *op.cit.*, pp. 17-49.

64) 2004년 11월 22일 방미시 미국제문제협의 오찬 연설. “노대통령 북핵 대미 메시지 논란”, 조선일보, 2004. 11. 22.

WMD 및 미사일 위협을 판단하고, 북한의 경제 전망과 함께 북한군 군사력 증강 추세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러시아와 동맹국 중국의 북한 지원은 물론 전통적 군사위협 이외에 북한의 대규모 재해재난, 급변사태에 따른 위협 평가 등도 망라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전쟁수행능력 평가 요소로서 국가급 차원의 전쟁지도체계, 국민의 안보의식, 장병들의 전투, 훈련, 사기수준, 전쟁지휘능력, 전략정보판단, 작전기획, 계획능력, C4ISR+PGM⁶⁵⁾의 현대전 수행능력, 대화력전 수행능력, WMD 및 미사일 공격 시 방호능력, 전시 인력 및 산업동원 능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의 남한 내 침투 실태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전작권을 전환 받는 한국군의 취약한 분야를 식별하여 전쟁수행 체제 정비는 물론 미증원 전력의 소요판단과 전시 한미 간의 역할분담 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평가

한반도이외 지역에서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서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위협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주변국에 대한 불특정 위협 평가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그 동안 한국은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를 위협국가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국가로 평가하였으며,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추이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왔다. 한국 측의 중국에 대한 기존 시각은 한국 전쟁시 중국군 개입과 북중군사동맹⁶⁶⁾을 고려할 경우 잠재위협국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중국을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으로 상

65) 현대전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으로 C4ISR+PGM은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와 Precision Guided Munition으로서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와 경찰이 실시간에 이루어져 식별된 적 위협표적을 정밀유도무기로 타격하는 체제를 지칭한다.

66) 1961년 7월 11일 북한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 제 2조는 일방이 무력침략을 당할 경우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 군사 통일의 역동성』, (서울 : 황금알, 2006), p. 212 재인용.

정할 경우 역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중 무력충돌시 한국의 연루 가능성을 들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해 미국과 상반된 입장⁶⁷⁾을 취해왔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역사적인 경험에 의거 잠재위협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 측 시각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적대세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중국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일본을 위협 국가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연 주변국에 대한 위협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느 기준과 수준에서 미국과 위협인식을 같이할 것이냐가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설정은 물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전통적 안보평가 이외에 지역 내 초국가적 위협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국가적 위협은 특정 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위협으로써 전통적 군사위협 못지않게 현존안보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⁶⁸⁾ 항공기·차량이용 자살폭탄, 조직적 방화, 지하철 유독가스 살포를 포함한 테러, 해적, 불법 무기거래, 인신매매, 마약밀매, 위조지폐를 망라하는 국제범죄, 지진·태풍·폭설·가뭄·해일을 포함한 재해재난, 에이즈·AI·사스·신종플루·결핵을 포함한 전염성 질병, 불법 체류자, 탈북자 등 비정상적 인구이동, 이산화가스 방출, 산성비, 황사, 수질 및 대기오염을 포함하는 환경오염 등 초국가적 위협 평가와 이에 대한 공동 위협인식은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글로벌 위협 평가문제이다.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활약해야 하는 한국으로서 국제안보 문제를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인권유린, 기근,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패한 국가에 대한 위협 평가, WMD와 미사일 확산위협, 지구온난화에 따른 문제, 에너지, 곡물, 철광석 등 주요 전략적 자원에 대한 안보평가 등도 글로벌 차원에서 포함시켜야 할 분야이다.

67) “2008년판 미 국가국방전략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적 선택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 국가국방전략서 발표”, 국방일보, 2008. 8. 3.

68) Chung Kyung Young, “Building a Military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 Feasibility and Design”,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2005, pp.151-181.

3) 갈등과 협력의 안보역학 평가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위협평가 외에도 남북화해 교류협력의 심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을 포함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등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신뢰구축에 일정부분 기여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의 일차적 목적이 전쟁 억제에 있다면,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위협인식의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미중·중일 관계의 발전 등 상호협력의 역학구조에 대해서도 안보환경 평가를 할 때 놓쳐서는 안 될 요소이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의 국력의 격차, 상이한 이데올로기, 군비경쟁, 영토 및 자원분쟁, 적대적 민족주의 등의 갈등적 요소가 있으나 일면 점증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역동성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교역과 직접투자 등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 급증하는 여행자의 왕래와 유학생 상호파견, 활발한 문화적 교류 등은 상호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포괄적 안보평가를 논의하였다. 작금의 안보환경 평가는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비전 설정은 물론 글로벌 코리아를 주장하고 있는 MB정부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5.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분석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며,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안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안보적 차원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라고 칭할 정도로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비중은 지대하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사시 전개될 미 증원계획 자체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핵을 보유한 북한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는 더욱 크다. 또한 미군 철수후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역사적으로 주변국이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족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결속된 한미동맹이 존속되어야 한반도 주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을 견제하고 테러 등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평택으로 재배치⁶⁹⁾와 110억불의 주한미군 현대화⁷⁰⁾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는 크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⁷¹⁾과 이라크 전쟁의 한국군 파병,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군사교육기관에 유학을 다녀온 한국군 장교들⁷²⁾은 수준급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⁷³⁾

2) 정치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은 포기할 수 없는 고귀한 이데올로기로써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

69)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은 1단계 2006년도까지 문산, 동두천 축선에 산재되어 있는 미2사단을 의정부 Camp Red Cloud와 동두천 Camp Casey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한미정상간 합의에 의거 평택과 오산일대로 재배치하는 계획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70) 주한미군 현대화는 150개 분야 110억불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개시하여 2006년도에 완료하였다. 구체적인 전력증강 내용은 Stryker 부대의 순환훈련, 전투기 공격기 추가 배치, AH64 공격헬기, 정찰헬기 ATACMS II, 첨단 탄약 등의 전투능력을 증강하였다. U2, Shadow, Predator 무인항공기, Global Hawk, 이동표적 탐지기, 정보센터 및 C4I 개선, 전구네트워크 상호운용성, 공동기획능력 등 지휘통제정보 능력을 보강하였으며, 고속수송선(High Speed Vessel) 전개훈련, 해상사전배치선단 등 신속증원능력을 강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주한미군의 군사능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였다.

71)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 참전 연인원은 325,517명으로 전사망자 5,099명, 부상자 11,232명의 희생이 있었다. 최용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429.

72)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총인원 3,543명이 미 지휘참모대, 국방대학원, 사관학교, 병과학교 등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현재에도 88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국방부 실무자와 인터뷰, 2008. 7. 15.

73) 미군 장성을 포함한 다국적군 작전 전문가들은 미국과 더불어 작전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군으로 영국군 다음으로 한국군을 평가하고 있다.

로기로 하고 있는 북한식 가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또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⁷⁴⁾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문제이자 국제문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국의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 이상 교포들의 미국 정계 등 주류진출에서 오는 모국에 대한 기여는 물론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식 교육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배출하는 국가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시 산파역은 물론, 한국전시 연인원 180만 명의 참전과 3만 7천여 명의 전사자, 10만 명 부상자들의 희생⁷⁵⁾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전후복구 지원과 외환위기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동맹국 중 한국은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민주주의 확산전략에 역할 모델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만약 한미 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감당할 수 없는 훼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상국가로 북한을 전환하는데 따른 역할 모델로 한국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3) 경제적 차원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지대하다.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및 전시 미증원 전력의 경제적 가치는 2,075억 달러⁷⁶⁾에 달한다. 전경련의 연구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우리 경제에

74) 미국의 조지 H. W. 부시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간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의기투합은 한반도 통일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해 준다. 독일 통일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망설이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거세게 반대하는 영국의 대처 총리, 독일 통일의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설득하는 부시 대통령의 남다른 헌신과 콜 총리의 눈물겨운 각고의 노력은 반대편에 섰던 강대국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독일 통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Horst Teltschik, 『329일 :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옴호연 역, (서울 : 고려원, 2004), p.45.

75) 한국전 기간 미국의 참전인원은 연 1,805,205명, 전사자 33,667명, 사망자 3,249명, 부상자 103,284명이다. New York Times, *World Almanac* (New York : New York Times Press, 1998), p. 55.

76) “주한미군 및 증원전력 가치 2,700억 달러(주한미군 200억+증원전력 2,500억)”, 한국일보, 2006. 9. 25.

연 1.2%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3조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장비 대체비용 때문에 매년 3조 3천억 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⁷⁷⁾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 및 교육비 증가에 따라 북한군 대비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제한이 뒤따른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의 국방예산을 격감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동맹으로 불리는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FTA의 경제적인 효과는 자못 크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2%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의 50%이상을 수출함으로써 놀라운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미국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이 파기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위성턴 및 뉴욕과의 상당수의 pipe-line은 단절될 것이다. 특히 World Bank나 IMF는 출자지분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대 주주는 미국으로서 IMF의 경우, 일본, 독일, 프랑스 3개국을 합한 것과 대등한 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⁷⁸⁾ 그만큼 국제금융, 통상질서에서 미국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국제경제 이슈에 대해 미국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도 유리하다.

한편, 미국으로서도 미군병력의 2%⁷⁹⁾가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자, 1998~2006년까지 8년 동안 56억 달러를 구매한 세계 다섯 번째 무기 수입국⁸⁰⁾이다.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77) “주한미군의 군사적 및 경제적 가치”, <http://blog.naver.com/clean506/100028720728>
(검색일 : 2009. 5. 1)

78) 2008년 말 미국은 IMF 주주의 17.4%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6.2%, 독일 6.1%, 프랑스 5.1% 3개국의 주주를 합한 17.4%와 동등하다.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23.

79) 미군 전체병력은 IISS발간 Military Balance 2007에 의하면 1506,757명으로 주한미군 28,500명은 미군병력의 2%에 해당된다.

80) 미 의회조사국의 “1998~2006 미국의 무기판매”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 133억불로 1위, 이어서 99억불 대만, 이집트 96억불, 이스라엘 85억불 등의 순. 한국 다음으로 그리스 57억불, 일본 37억불, 영국 32억불 등이다. “한국, 세계 5번째 미국산 무기구매국”, <http://weapon.tistory.com/entry> (검색일 : 2009. 4 .3)

미국의 실익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FTA 체결시 NAFTA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의 FTA국가로서 미국의 동북아 교역국가중 지경학적 중심에 위치한 한국과 우선적으로 체결한 FTA를 축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여 동북아 지역 FTA 체결을 주도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73만 6천명의 유학생 중 한국유학생이 10만 3천여 명으로 최대 유학생⁸¹⁾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학비와 체재비는 물론, 지난해에는 8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미국을 여행한 것 역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4) 평가 및 동맹의 제한요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양국 공히,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는 지대하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으로서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축이자 통일이후에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으로서도 동북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글로벌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확산전략의 역할 모델국으로서 한국의 동맹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약소국이 강대국과 체결되는 동맹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자율성이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되곤 한다. 약소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비대칭 동맹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맹의 급격한 파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⁸²⁾ 또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가전략의 중심에 있고 모든 국가역량이 한미동맹 강화에만 치중될 경우, 전략동맹과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 중국과의 협력관계 악화,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조할 경우, 블록간 긴장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 동맹국 상호간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한미 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상호존중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충돌 등 동맹관리에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81) 미 국토안전부에서 2009년도 3월 5일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미국 내 유학생 수는 한국에 이어 인도가 8만 8천명, 중국이 3위로 7만 2천명, 일본이 4위로서 4만 2천명이다.

“미국 내 유학생 한국 출신 최대”, <http://blog.daum.net/callcallme/5799958> (검색일: 2008. 8. 7)

82) 자율성과 안보교환 모델을 지칭한다. James. Morrow(1991), op.cit., pp.904-933. 김우상, 『신한국책략』, (서울:나남출판, 1998), pp.38-39. 재인용.

제 4 절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 설정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한미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고찰하였고, 북한위협, 동북아 불특정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 글로벌 위협을 포함하여 상호협력추세의 안보환경 등 포괄적인 안보평가를 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 안보,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전략적 분석을 전제로 미래 동맹이 지향할 비전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통해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억제 실패시 군사작전에 승리하여 자유·민주 통일 정부 수립에 기여하며, 동북아 차원에서 갈등과 대립의 냉전 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안보 질서로 재편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와 자원 및 환경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을 한미 전략동맹의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와 남북한 신뢰증진을 통해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완성하는데 저해요소 아닌 촉진요소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북한 정권의 평화적 변환,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등 북한을 ‘정상 국가화’ 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평화적 변화와 북한 체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한미 간 개별적으로 운용해 왔던 對 북한 공식 및 민간차원의 접촉의 창구를 정치, 경제, 군사, 인권, 문화, 환경 등 제 요소를 통합하여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미 Task Force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도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사회를 시장경제체제로 유도해 나가며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북핵 폐기와 함께 미북 국교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

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정의 제도화 전략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축과 연계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중요한 공격축선일 수 있는 평강·철원지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유엔사의 정전관리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시 유엔사의 위상과 한반도 유사시 미래역할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북 및 일북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 불능화, 핵폐기 진전에 따른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⁸³⁾에서 북한을 해제시키고, 적성국가 교역금지법 적용 국가로부터 북한을 제외시켜 궁극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을 통한 북한 경제 소생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을 해야 비로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협력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상간 회담을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정례화하고, 연례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SCM)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로 격상시켜야 한다. 특히 서울과 워싱턴에 한미양국의 외교, 안보, 통상, 對北분야 정책 및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한미전략동맹 비전그룹’을 상주시켜, 한미 현안 이슈를 전략동맹의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조명, 상호 협의하고 정책조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 운용할 필요가 있다.

83)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가 포함된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한조치는 대외지원제한, 무기수출 및 판매금지, 이중목적 사용품목 수출제한, 기타 재정지원을 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87년 10월 25일 중동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귀국차 탑승한 KAL기가 인도양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폭파된 사건으로 미국은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포함시켰다. State Sponsors of Terrorism”, <http://www.state.gov/s/ct/c14151.htm>, (검색일 : 2008. 4. 22)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후 2008년 8월 11일까지 테러지원 명단에서 테러지원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시키기로 발표를 했으나, 북한의 핵검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제가 지연되거나 안 될 수도 있음을 밝힌바 있다. “미, 북한 테러지원 조건부 해제, 강조”, <http://www.naver.com>, (검색일 : 2008. 8. 1)

2. 동북아 협력안보 질서로의 개편

다음은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동맹으로서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의 냉전적 안보질서를 상호존중과 공존의 협력안보 질서로 개편하는데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은 이미 6자회담 틀 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 포럼 실무그룹⁸⁴⁾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여 2007년 10월 20일 모스크바에서 2차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군비증강이나 적대적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하는 것 보다 협력안보가 자국 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유익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안보 인식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 몽골을 회원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원칙이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레짐은 현행 양자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역내 특정 국가를 공동의 위협으로 상정하는 NATO식 집단방위체제나 침략 국가에 대해서 응징하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비전통적 안보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자간 역습은 비전투 시나리오에 국한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레짐은 역내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는 장이어야 한다.⁸⁵⁾

동북아 평화안보레짐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 정상회담에서는 추진이 용이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무국과 다국적군 사령부 창설을 협의하여 합의하고 외교·국방장관으로 구성된 정치위원회에서는 전략지침 및 작전지시를 역내 국가의 최고 군 고위급 인사 즉 한미 합참의장, 일본 통막의장, 중국과 러시아, 북한 및 몽골의 총참모장 등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에 하달한다. 군사위

84)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미북 및 일북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분야에서 실무그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9. 19 공동성명”, <http://blog.daum.net/leebywan/13749778> (검색일 : 2008. 4. 22)

85) 박종철 외,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 형성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p. 15-20.

원회에서는 작전지침과 임무를 사무국과 다국적군사령부에 하달한다.

사무국은 동북아 안보인식 공동체 연구센터와 초국가적 위협 연구센터, 외교안보교류 협력센터를 운용한다. 안보인식 공동체 연구센터는 정책결정 입안자·전문학자·국방위·통일외교통상분과 국회의원·다국적기업인·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초국가적 위협연구센터는 역내 테러, 국제범죄, 재해재난, 전염성 질병, 환경, 불법인구이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공동대처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외교안보교류 협력센터에서는 역내 국가의 3개국 이상의 외교안보국방인사들의 상호방문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직통선 구성, 동북아 국방대학 창설 추진, 다자간 해상공동수색 구조훈련, 위험한 군사행동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등을 추진한다. 동북아 다국적군 사령부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조기경보 등의 임무수행을 하는 위기관리센터, 우발사태를 상정한 시뮬레이션 연습센터,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군을 전개시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의 협력안보질서를 재편하는데 양국 공히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와 다양한 네트워크⁸⁶⁾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태평양사(Pacific Command, PACOM)⁸⁷⁾ 및 아태안보문제연구소(Asian Pacific Center for Security

86)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는 달리 역내의 모근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한국은 1953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19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1990년 러시아와 국교정상화, 199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 1991년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미일중러 주재국 대사관에 장성급 국방무관이 파견되고 있고, 북한과는 장성급 대화를 하고 있다. 한국과 역내 국가들과 쌍무간 안보군사협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정경영 외, 『동북아국방대화 가능성과 추진전략』, (서울 : 국방부, 2005), pp. 78-82.

87) 1947년 창설된 미 태평양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통합군사령부로서 산하에 지상군사령부, 합대사령부, 공군사령부, 해병대 사령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의 상급부대 역할을 수행한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1998년부터 아태지역의 최고 군사지도자회의(Chief of Defense, CHOD)를 주관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안보,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전 요소를 식별하고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면서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SEAS(Seminar for East Asia Security)를 개최, 아태지역의 안보 전문가 및 군인을 초청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순회하면서 역내 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으며, 동북아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SNEAS(Seminar for Northeast Asia Security) 대화체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2월 26일 29만 명의 희생이 발생한 쓰나미 재앙시 미 태평양사는 병력과 장비는 물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인명의 희생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Studies, APCSS)⁸⁸⁾ 등을 통해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운용해 왔다. 따라서 한미 간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역내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초국가적 위협 발생시 조기경보 및 사전 지정된 역내 국가들의 신속대응군을 동북아 주둔 미군의 전략수송자산을 활용하여 우발사태 지역에 전개시켜 대처할 때,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군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강화시켜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3.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제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엔의 도움과 한미동맹에 힘입어 성장 발전한 한국은 제 3세계 국가의 개발 모델국이 되었다. 한미 양국은 전쟁과 기근, 인권이 유린당하는 실패한 국가와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재건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소망과 비전을 심어 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작전은 향후 국제분쟁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모델이 아닐 수 없다. 한미 간 이라크 파병지역에서의 지휘체제, 정보공유, 전투근무지원, 현지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 노하우는 향후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발휘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라크전을 통해서 도출된 교훈을 분석하여 교리, 개념, 상호운용성 등을 통한 동맹군으로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2003년 미국은 버지니아 Norfolk에 위치한 미 합동군사령부에 동맹군변환사령부(Allies Transformation Command : ATC)를 창설하였

88) 아태안보문제연구소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미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미 태평양사 부설연구소다. 아태지역 45개국의 안보, 국방정책입안자, 군인, 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안보 이슈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오고 있다. 아태지역의 안보정책입안자와 군인들은 물론 미래지도자가 될 차세대 지도자들간 신뢰구축과 지역안보 이슈들에 대한 군사, 경제, 정치, 외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으며 한국군도 2006년 11월 1일부로 3명의 장교가 ATC에 파견되어 연합참모 및 연락장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WMD 및 미사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다. WMD 및 미사일의 무기나 기술이 국제테러리스트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으로 WMD 및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도 PSI 참가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다.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3세계의 자원보유국 상당수 국가들이 실패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PKO과병 또는 콘소시엄을 구축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안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 온실가스 규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 발전업체가 원자력 발전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 분야의 협조는 시급하다. 또한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5,000여명의 한국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18개월간 어학연수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Work, English Study Tour, WEST)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못 의미가 크다.

제 5 장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 발전방향

현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국 내 여론은 동맹해소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에서 현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현상유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의 군사적 단일패권이 적어도 50년은 간다고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틀을 21세기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당면한 한미동맹의 재정의 작업은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전세계 차원에서 ‘동맹의 강화’라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맹의 유연화’를 추진하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두 흐름이 맞부딪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신군사전략이 미군의 전방전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국 내의 반미기류로 한미동맹은 결속력이 떨어지고 탈냉전 및 남북 화해협력분위기로 동맹의 기본 축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한미동맹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미동맹도 냉전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과거의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새로운 21세기형 동맹관계의 구축을 통해 존재이유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한미동맹을 21세기형 동맹관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맹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만으로는 안되며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공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은 공통의 전망과 목표가 없이 지극히 실용적인 두가지 목적 - 북한의 재침 방지와 일본 방위-을 위해 존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굳이 한미동맹에서 공통의 목표가 존재

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한 냉전형 동맹관계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국의 민주화와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군사동맹을 넘어 비군사 부문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균형적인 포괄적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반미주의의 원인은 ‘민족주의’라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있기 때문이다. 균형적인 포괄적 동맹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부속물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동맹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현 상태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도 고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할 가치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시장경제 등이 될 수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미동맹의 목표와 비전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을 공동의 위협 요인으로 상정한 대북 억지력 중심에서 지역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전히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냉전 이후의 각종 민족, 지역분쟁과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전염병, 마약, 해적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⁸⁹⁾

동북아 지역적 차원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체제가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둘째,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

89) 2003년 11월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1세기 한미동맹의 방향을 예고하는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제4항),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적응시키며(제6항),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제11조) 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성명내용은 대북 억지력 위주의 한미동맹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전 세계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들은 당시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방위에 국한된 배타적 쌍무동맹관계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평화유지활동 등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강화의 역할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관계로 발전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역적 차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모범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때 한미 동맹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또 다른 중요 동맹인 미.일 동맹과의 관계설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 .미. 일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진하되 이것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배타적인 지역동맹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다자안보협의체와의 거리도 좁히고 역내 안보대화를 통한 지역차원의 군비통제체제 구축 노력에도 적극 참가해야 할 것이다.

제 1 절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군에게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조국과 국민을 스스로 지킨다는 안보관 정립이다.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마다 끊임없이 외세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전후 처리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권이 찬탈 당했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멀리는 삼국시대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삼국통일을 했으나 수와 당태종이 고구려로부터 당한 수모를 만회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 등 전쟁지도부의 전략적 안목 결여로 결과적으로 고구려 고토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임진왜란시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조명연합군을 결성하여 왜군과 작전을 하면서 백성의 고통

과 민족적인 굴욕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한민족의 역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명일간 강화협상에서 조선반도 분할론을 협의하였다.⁹⁰⁾ 더 나아가 동학란 진압을 위해 청군을 요청하자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한반도에 파병하여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일전쟁 시에도 전쟁의 마당을 제공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우리의 조상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과 보호권을 승인하는 포츠머스 강화조약⁹¹⁾을 체결하여 결국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치닫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을 패전시키는 군사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됨에 따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달리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해방이후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또한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남침을 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유엔 결의로 창설된 유엔군이 반격하여 38선을 돌파할 때 북한은 중국에 파병을 요청하여 한국전쟁에 개입, 지역 분쟁화함으로써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수많은 외세개입은 한결같이 한민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수난과 국가의 이익이 수탈당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한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군에게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작전에서 피 흘려 쟁취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방어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對美 의존적인 안보관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국력이 이처럼 성장했다면 우리의 자주적인 안보관도 비례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안보는 불가능하며 전시에 적과 싸워 승리할 수도 없다는 패배의식과 국민의 이완된 안보의식⁹²⁾이 움크리고 있었다. 이제 전시 작통권 전환에 대비

90) 한명기, “조선의 명군에 대한 결전요구와 군사작전”, 『임진왜란기 조명 연합작전』,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6), p. 200.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03.

92) 최근 6,0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보의식 조사결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50%, 유사시 북한과 싸우겠다고 대답한 대학생이 10명중 1명밖에 없었다는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박세직, “국민 호국 정신 선양이 향군의 큰 사명”, 국방일보, 2008. 4. 22.

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조국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안보관을 정립하여 국방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군 스스로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국격에 걸맞는 동맹관이며, 신장된 국력에 부합되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떠맡을 때 한국이 보다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⁹³⁾ 이상희 국방부 장관 시절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지하면서 전투형 군대보다 행정형 관리형 군대로 변해가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편한 군대가 민주군대라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질타하면서 “강한 군대, 선진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편한 군대가 아니라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 군의 모토를 ‘전투복 입은 자는 전투위치’⁹⁴⁾로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이임한 B. B. Bell 연합사령관이 재임기간 5번의 연습중 두 차례의 연습을 한국군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체험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고무적인 평가⁹⁵⁾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제 2 절 한미 위협인식 구조에 대한 대응방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위협인식구조가 부시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2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그 어느 주제보다 북한문제에 대해 한마음”이라며,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해서는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⁹⁶⁾ 부시 행정부 시절과 같이 한미는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위협인식차이로 인한 양국의 갈등 사례와

93) 정경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관 및 동맹관 정립”,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주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2007. 4. 17.

94) 이상희 국방장관, “전투복 입은 자는 전투위치로”, 조선일보, 2008. 4. 12.

95) Bell, Burwell B. “Enduring ROK-U.S. Alliance Going Together 21st Century and Beyond”, 13th Neareast Forum. Sejong Culture Center, 3 April, 2008.

9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0/20090220001477.html. (검색일: 2009. 2. 20)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분석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익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미간 북한의 위협 인식 범위와 대응방법의 차이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 범위를 본토를 포함하는 전 세계로 보고 있다. 북한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테러집단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능동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PSI에 참여를 요구해 왔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범위를 한반도로 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도발 가능성 때문에 능동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르다. 둘째, 한미 양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주변국과 관련된 국가 이익의 차이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한미동맹이 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MD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으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와 관련된 분쟁에 자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루되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의 주변국들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공동선언을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주변국들의 반응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방위비에 대한 부담으로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변화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 또한 지연될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동맹의 발전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양국의 위협인식구조가 일치하는 한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와 전략적 군사동맹을 둘러싼 양국과 주변국의 입장차이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시 행정부의 과제가 한미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는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해 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을 조율하고, 전략적 군사동맹을 둘러싼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조화시키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미국의 위협인식 구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첫째, 미국의 능동위협인 테러집단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냉전 기간 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북한의 억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완전히 끝난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 찰스 캠벨(Charles C. Campbell) 한미연합사 참모장 겸 미 8군사령관(육군중장)이 2004년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 위주에서 동북아 기동타격대 및 전 세계 대 테러전 투입 군으로 확대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는 수차례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바 있다.⁹⁷⁾ 더 나아가 미국은 한미 군사관계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협력 파트너로써 테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PSI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PSI는 운송수단인 미사일과 관련된 물질 확산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카우(Krakow)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질의 육상·해상·공중 수송을 통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창함과 더불어, PSI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최초의 구상에 동조한 나라는 11개국으로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이다. 핵심그룹으로 불리는 11개국이 참가

97) 국방부, 『국방백서 2006』, (서울 : 국방부, 2006), p. 112.

한 2003년 6월 12일 제1차 마드리드 회의와 6월 18일 아세안 지역포럼을 통해 PSI실체가 구체화 되었다. 2003년 9월 3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PSI의 「차단원칙성명」(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을 채택했다. PSI는 2004년 4월 28일 채택된 최초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을 실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⁹⁸⁾ PSI는 단순한 군사적 억지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PSI의 목적을 지지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G-8, EU, NATO주 등 93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⁹⁹⁾ 일본과 호주 모두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3년 5월 31일 폴란드 크라카우 연설에서 최초로 PSI 구상을 발표했을 때부터 적극 동조한 핵심그룹이다. 2004년 10월 일본은 해상저지훈련(Team Samurai 04)을 실시했다.¹⁰⁰⁾ 호주는 첫 PSI 훈련 (Pacific Protectoe 03)을 유치했고, 2003년과 2004년에는 PSI 작전 전문가회의(PSI Operational Experts Meetings)를 개최했다.¹⁰¹⁾

2009년 2월 16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부는 PSI의 취지와 의도는 공감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우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참여의지를 시사했다.¹⁰²⁾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5일 케빈 러드(Kevin Michael Rudd)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국제 핵 비확산 군축위원회(ICNND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한국은 PSI의 8개항 중 역내 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해왔으며,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

98) www.proliferationsecurity.info/introduction.html (검색일 : 2009. 3. 18)

99) 국방부, 『국방백서 2008』, (서울 : 국방부, 2008), p. 10.

100) www.proliferationsecurity.info/exercises.html (검색일 : 2009. 3. 18)

101) www.defence.gov.au/PSI/default.htm (검색일 : 2009. 3. 18)

1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5/2009030500840.html. (검색일 : 2009. 3. 5)

다.¹⁰³⁾ 주변 국가에 비해 가입이 늦기는 했지만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측면에서 PSI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수동위협이 중국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1996년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표방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잠재적으로 견제해야 할 국가, 즉 전략적 경쟁관계(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급격한 방위예산 증가와 군 현대화는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5-1] 동북아시아 주변국 국방비 및 군사력

구 분	중 국	한 국	일 본	러시아
국방비(억\$)	625	157	451	619
GDP대비 국방비(%)	3.7	2.4	1.0	4.4
병력(천명)	2,255	683	240	1,037

출처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06), p. 58.

중국을 수동위협으로 인식한 미국은 일본을 공고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전력투사근거지로 활용할 것이며, 한국을 그 지원기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북아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이 단순한 대북억제 수단으로서가 아닌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군사적인 균형자의 역할을 위해 MD체제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D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전략방어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서부터 출발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계승하여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국가미사일 방어’(NMD)와 동맹국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단·중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역미사일 방

1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6/2009052600560.html (검색일 : 2009. 5. 26)

어'(TMD)로 나누어진 '탄도미사일 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

계획을 추진하였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9·11사태를 통해 불량국가의 WMD 확산 등 모든 테러로부터 미국본토, 동맹국,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NMD와 TMD를 통합한 MD정책 추진을 우선 안보정책 과제로 공식 천명했다. 이와 같은 MD계획은 동북아시아에서도 북핵, 미사일 확산, 그리고 중국의 잠재적 패권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¹⁰⁴⁾

미국의 MD계획에 대한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반응은 다양하다. 중국은 미국의 MD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째,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지위 유지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전략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대만을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⁵⁾ 일본의 경우 MD참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¹⁰⁶⁾ 2007년 10월 미군 합동전술지상기지(JTAGS : Joint Tactical

Ground Station)가 일본 북부의 아오모리현 미사와 미군기지에 배치됐고, 12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2008년 1월 30일에는 지상 배치형 지대공유도탄인 패트리엇3(PAC3)가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시 육상자위대 다케야마기지에 배치됐으며 2010년까지 기지 11곳 16개 부대에 PAC3를 배치해 육상 방어시스템을 일단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탄도미사일

104) 이정훈. "Rising Security Treats in Northeast Asia and the Significance of Missile Defense", 『신 아세아』 제12권 제2호, (서울 : 신아세아질서 연구회, 2005), p. 49.

105) 이서항. "미국의 MD정책과 동북아 안보." 『국가경영전략연구소』 1권 2호,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02), p. 4.

106) Takao Sebata, "Japan's Dilemma and a Problem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the 1997 Guidelin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X. No. 3(Fall 2007), pp.154-157: In the 1997 Guidelines. the SDF could be dispatched anywhere in the world if the United States called on Japan's support. Japan participated in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reinforced defense cooperation under the 1997 Guidelines.

을 JTAGS가 포착하고 SM3로 해상 요격 후 요격이 실패한 미사일을 PAC3가 재차 요격하는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¹⁰⁷⁾

호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MD 시스템 동참을 희망하고 있다. 2007년 6월 2일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최초로 3개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3국은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7년 6월 5일 일본과의 국방장관회담 및 ‘일·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브랜던 넬슨(Brendan John Nelson)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함께 탄도미사일방어망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 국방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일본에 더해 호주를 MD체계 구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호 3국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⁸⁾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한국의 역할이 동북아로 확대되었을 경우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MD체계에 동승하기를 거부한 바 있다. 2008년 10월 1일 노무현 전대통령은 “나는 PSI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MD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¹⁰⁹⁾ 그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한미군사동맹관계는 미·일·호 3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만큼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과정에서 MD와 관련된 한미 양국의 의견 차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위협인식구조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은 동맹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107) http://news.chosum.com/site/data/html_dir/2008/01/31/2008013100161.html. (검색일 : 2008. 1. 31).

108) 한국국방연구원. 『2007-2008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8), pp. 108-109.

109) http://news.chosum.com/site/data/html_dir/2008/10/02/200810020042.html, (검색일 : 2008. 10. 2)

오바마 대통령은 대 테러전의 승리를 위한 동맹국의 파병과 지원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의 공동대응을 기대하고 있다.¹¹⁰⁾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았을 때 PSI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MD에의 협력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정부는 동맹국의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위협인식 구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냉전 이후 한미 군사관계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능동위협인 북한에 대한 억제력 약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는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담보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¹¹¹⁾ 주한미군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억지이며, 실패할 경우 한국군과 더불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분쟁 발생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로 인한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의 퇴색은 대북억제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대북억제 전략적 변화와 관련된 우려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를 위한 한국과 미군의 대북 연합 군사전략으로 알려진 것이 소위 ‘작전계획(OPLAN) 5027’이다. 이것은 지난 1974년 미 8군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대비해 처음 수립한 것으로, 이후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2년 간격으로 재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억제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2여단의 이라크 투입결정 논의는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시 작전계획 5027의 가동 여부, 즉 미군 증원전력의 투

110) <http://www.whitehouse.gov/issus/foreign.policy> (검색일 : 2009. 5. 26)

111) 김태현, “억제이론과 안보공약 :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주한미군과 안보협력』, (서울 : 세종연구소, 1996), p.184.

입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대북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혹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의혹은 동맹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위협인식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북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새로운 군사협조기구를 통한 한반도 대북억제 능력 확보는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도적인 면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주한미군의 일정수준을 상시 유지하기 위한 조치와 미국의 증원을 보장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을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의사협조기구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수립되어 한미 양국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양국의 군사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군사적 능력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주한미군과 대규모의 증원전력에 의존하지 않고 유사시 독자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 격퇴 할 수 있는 군사 능력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증원전력이 도출할 때까지 방어위주의 전술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휴전선 전방의 공격용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명백한 행동을 취할 경우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절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방안

한미동맹은 양국의 위협인식구조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주변국들의 이익과 신뢰 증진이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군 구성비의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과 지상군 숫자 증가 등의 정책으로 보았을 때,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국병력에 대한 파병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의 확대된 임무를 수행할 때 군 구성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한반도 방어 전력과는 다른 별도의 기동 전력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력인 한반도 방어진력은 전적으로 한국군의 통제 하에 두며 한미간 연합전력으로 이루어질 기동전력은 한미간 협의에 의해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국의 독립적인 작전권 보장과 한반도 방어진력과 기동전력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양국의 상이한 위협 대응 방식과 국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지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대됐을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인식할 새로운 위협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의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억제전력은 한반도 범위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군은 대만과 같은 주변국의 이익이 민감하게 연계된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는 군사적 돌발 사태 발생시 한미 군사협력체제가 주변국의 분쟁지역에 간섭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미 전략적 동맹이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시아에서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은 국가간의 군사교류 활성화와 포괄적인 공동안보위협에 대해 일본, 러시아, 중국과 함께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변국과의 국익을 조화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구화는 지구적인 무기거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증가 등 세계적인 군사질서를 말하는 것으로,¹¹²⁾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PSI의 확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PS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초기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4년 5월 31일까지 PSI에 대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추진과

112)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4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8), p. 21.

국제법상의 합법상의 문제 때문에 가입을 보류했으나, PSI출범 1주년 기념회에서 가입을 결정했다. 95여 개국이 가입하고 동북아시아 주변국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은 PSI의 틀을 활용한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법은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과 주변국들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예방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활동은 회원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변국가들의 분쟁 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회원국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지구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PSI를 중심으로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할 때, 북한 핵시설과 테러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과 주변국의 이익과 신뢰 증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이익, 신뢰, 위협, 국내정치 구조, 제도 등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수 중에 국내정치 구조와 제도는 동맹의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에 공동의 위협인식구조는 동맹의 생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동맹국 사이의 위협인식차이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 양국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이슈들은 동맹의 약화나 붕괴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동맹국 사이에 포괄적 국가이익이나 신뢰가 증진될 경우 집단안보체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한미동맹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양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차이가 많았으며 이는 여러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효선이 미순이 사건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반미감정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 등 양국 정부간의 대립구조로 발전했다. 동맹국간의 위협인식의 차이가 동맹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한미 군사동맹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통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적관계로 급격하게 선회했으며, 주변국의 이익과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전략적 군사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 한국의 국력, 미국의 군사혁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반드시 지향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월 20일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21세기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전략적 군사동맹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 위기, 정권 교체에 따른 국내 정치 구조 변화와 같은 제한사항의 극복과 함께, 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이익과 신뢰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양국정부가 세계경제위기와 미국 정권교체는 한미동맹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변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를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략적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북한 위협인식 범위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법을 서로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이 겪었던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테러와의 전쟁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국과 주변국의 포괄적 이익과 신뢰 증진은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변국의 이익과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안보문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대북억제전력은 한반도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주변국의 지역분쟁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미 전략적 동맹이 주변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한미 전략적 군사동맹은 국가간의 군사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군사영역에서의 지구화 흐름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한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95여 개국이 참

여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PSI의 틀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포괄적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위기나 국내정치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위협인식을 함께하는 한 전략적 군사동맹 관계로의 발전방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큰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적 군사동맹의 구현을 위해 상대방 국가의 위협대응 방식을 충족시키고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익과 신뢰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21세기 초 신 국제질서는 민족주의의 분출, 종교적 갈등, 무역 분쟁, 환경 문제, 국경분쟁 및 핵무기 확산 등 세계도처에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낙관적이지 못한 요인들로 인하여 냉전시대보다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냉전구도의, 해체는 지역 및 갈등양상에 따라 세계질서를 다극체제와 단·다극체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극 체제양상을 보일 경우라도 그 중심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질서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다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미·일 협조체제와 중·러·북의 복원된 협력체제가 대립하는 두 가지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정형화 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계질서와 동북아 질서가 공히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강대국에 비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안보환경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동북아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영토적인 냉전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전략구조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4강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비증강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북아지역은 경제적 잠재력과 정치력을 지닌 전략적 무대로서 전환기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긴장완화가, 정치적으로는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도 이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은 잠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4강의 이해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전략적 이점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장완화의 접근은 시도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전략 경쟁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을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 포위하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국방정책의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 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면서 경량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

이다. 중국에 대하여는 냉전시대에 구소련의 태평양으로의 나타날 것이다. 중국에 대하여는 냉전시대에 구소련의 태평양으로의 남하를 봉쇄하였던 것과 같은 아시아 전역으로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전략을 택할 것이며, 일본에 대하여는 견고한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상보적인 이익을 토대로 대 중국, 러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하여는 친서방주의적인 세력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지속하고 군사적인 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필적하는 세력으로의 재부상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변화는 미국 주도적 신질서를 개편, 지역패권주의의 자극, 국지분쟁요인의 상존,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역내국가간 새로운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반면에 새로운 협력관계도 동시에 모색하는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전략구도 변화로 불특정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할 것이다. 둘째, 강대국 간의 정책변화와 산화간 역학관계 변화자체가 한국의 생존과 안정유지에 민감한 영향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지역적인 군비경쟁 지속에 따른 새로운 갈등관계 형성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이다. 넷째, 광범위한 분야에서 즉, 영토 및 해양에서의 국경과 자원에 의한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적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안보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북관계는 현재의 대치국면에서 점차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을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면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낙관적 측면을 강조한 미래 예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과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은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맞물려 우리의 안보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의 동맹선택기준에 유의하여 국가 전략적으로 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한 환경을 극복하고 양국이 협조관계의 틀 속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안정과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과 안보현실 및 전략적 목표의 인식하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는 우호 선린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국 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21세기의 상당기간을 의존해야 하는 한·미 동맹의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항구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둘째, 미국의 전력투사방향의 변화와 우리의 안보역량을 고려하여 한·미 동맹의 역할변화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동맹의 역할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한·미 동맹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이고 대칭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SOFA의 불평등 조항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바람직한 변화를 통하여 미·일 동맹에 버금가는 한·미 신 안보 공동선언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국가안정보장위원회,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 서울 : 국가안전보장위원회, 2004.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국방부, 『국방백서 2006』, 서울 : 국방부, 2006.

_____, 『국방백서 2008』, 서울 : 국방부, 2008.

공군대학, 『미국의 정세와 대한반도 정책, 공대교본 CSC-1-4』, 대전 : 공군대학교, 2004.

공성진 · 최종철, 『대한민국 안보전략』, 서울 : 시대정신, 2008.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 민족분열과 국제개입 · 갈등』, 서울 : 서울대학교, 2000.

김덕중, 『미국의 동북아 정책』, 서울 : 세종연구소, 1995.

김우상, 『국제 관계론 강의』, 서울 : 한울, 1997.

_____, 『신한국책략』, 서울 : 나남출판, 1998.

_____, 『신한국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 나남신서, 2001.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한울, 1995.

김태운 외, 『신 국제질서와 남북한』, 광주 : 조선대학교, 1998.

김태효,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4.

김태현, 『신 동북아 안보질서』, 서울 : 세종연구소, 1997.

_____, “억제이론과 안보공약 :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주한미군과 안보협력』, 서울 : 세종연구소, 1996.

매일경제인수위취재팀, 『MB노믹스 액션플랜』,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8.

박상식, 『국제정치학』, 서울 : 집문당, 1997.

박종철 외, 『동북아 안보 · 경제협력체 형성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방위청, 『일본 방위백서』, 동경 : 방위청, 2006.

송대성,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세종정책총서 2003-4』,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육군사관학교, 『북한학 : 정치, 군사 통일의 역동성』, 서울 : 황금알, 2006.

이상우,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II』,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8.

_____,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8.

이상현, 『한미동맹 로드맵 : 비전 쟁점 전략』, 성남 : 세종연구소, 2008.

이춘근, 『미국의 신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세종연구소, 2000.

이철형, 『고시 정치학』, 서울 : 법문사, 1987.

이청헌 외, 『신 국제질서와 남북한』, 전남 : 조선대학교, 1998.

임을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부산 : 신지서원, 2002.

Horst Teltschik, 『329일 : 베를린 장벽 붕괴에서 독일 통일까지』 움호연 역,

서울 : 고려원, 2004.

윤현근 외, 『한미동맹 50년과 주변국의 역할, 안보연구시리즈 제4집 2호』,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엄태윤, 『한미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서울 : 집문당, 2007.

조성열,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재정의』,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정경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의 비전』, 서울 : 국방대학교, 2006.

최평길 외, 『21세기 동북아 정세예측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서울 :

집문당, 199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서울 : 통일교육원, 2008.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2008.

하영선,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한국국방연구원, 『2007~2008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8.

한국어 사전 편찬회편, 『한국어 대사전』, 서울 : 현문사, 1976.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 서울 : 오름, 2004.

홍규덕, 『한미 동맹의 미래와 주변국의 입장』, 국방연구 43호, 2000.

나. 연구논문

구본학, “주한미군 조정과 부시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신 아세아 제12권 제1호』, 2005.

김구섭, “국제문제”,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한국국방연구원, 2001.

김국진, “중·미, 중·일 분쟁시 우리의 대응방안”, 『정책연구 제 126호』, 1997.

김계동,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개선방안”, 『사상과 정책』, 서울 : 오름, 1998.

김일영, “주한미군 재편 : 배경, 경과,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5집 1호, 2003.

김희영,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에 관한연구”, 서울 : 국방대학교, 2003.

김형남, “동북아 4강의 군사정책에 관한 지정학적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원, 1984.

남창희, “한국의 적정 방위비 분담연구”, 서울 :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1999.

민영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건영 · 남창희 · 이수형, “미국의 동북아 동맹전략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2.

박인휘, “단극시대 미국패권전략의 이론적 기초 :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 19권 3호』,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2003.

이내영 · 정한울, “반미여론과 한미동맹”,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

- 세종연구소, 2003.
- 이대우, “한미관계 현안과제”, 『차기정부의 국정현안과제』, 성남 : 세종연구소, 2007.
- 이삼성,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9권 1호』, 2003.
- 이서항, “미국의 MD정책과 동북아 안보”, 『국가경영전략연구소 1권 2호』, 2002.
- 이정훈, “Rising Security Threats in Northeast Asia and the Significance of Missile Defense”, 『신 아세아 제12권 제2호』, 2005.
- 이춘근, “미국의 신 동아시아 전략과 주한미군”, 서울 : 세종연구소, 2000.
- ,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 유원식,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전재성, “한미동맹 50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정경영, “유엔사의 미래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21세기 군사연구소, 2007.
- 한국국방연구원,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조정방안,” 『국방발전 모노 그래프』, 대전 : 한국국방연구원, 2004.
- 한용섭, “신정부의 한미동맹 관계 정립방안,”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홍규덕, “한·미 동맹의 미래와 주변국의 입장”, 『국방연구 43호』, 2002.
- 황영배, “군사동맹의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5.

다. 인터넷 자료

<http://blog.daum.net/callcallme/5799958> (검색일 : 2008. 8. 7)
<http://blog.naver.com/clean506/100028720728> (검색일 : 2009. 5. 1)
<http://new.chosun.com>. 다수 검색.
<http://www.defence.gov.au/PSI/default.htm>. (검색일 : 2009. 3. 18)
<http://www.gallup.co.kr/gallupdb-04List.asp>. 다수 검색.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 2009. 7. 30)
<http://www.proliferationsecurity.info/introduction.html>. (검색일 : 2009. 3. 18)
<http://www.state.gov/s/ct/c14151.htm>, (검색일 : 2008. 4. 22)
<http://weapon.tistory.com/entry> (검색일 : 2009. 4. 3)
<http://www.whitehouse.gov/issues>. (검색일 : 2009. 5. 26), 다수검색.

2. 국외문헌

Buzan, Barry. *People, State, and Fear :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 in the Post-Cold War Era*. Harvester Wheasheaf, 1991.

Cha, Victor.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an Fransico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Christenson, Thomas &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2, Spring, 1990.

Cossa, Ralph, A. *U.S.-Korea-Japan Relations Building Toward a "Virtual Alliance."* Washington, D.C. : CSIS, 1999.

De Mesquita, Bruce Bueno,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 People's Pow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Washington D.C. :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2000.

De Mesquita, Bruce Bueno. *The War Trap*,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1.

Dujarric, Robert. *Korean Unification and After*. Washington, D.C. : Hudson Institute, 2000.

- Griffiths, Martin and Terry O'Callaghan,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Key Concepts*. London : Routledge, 2002.
- Higgins, 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1946-1967*.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Holsti, K. J.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2nd ed. Englewood Cliffs : Prenrice-Hall, Inc, 1972.
- IISS. *Military Balance*. London :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7.
- John Baylis,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4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8.
- Kegley, Charles W. &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7th ed. London : Macmillan Press, 1999.
- Kennan, George F. *The Fateful Alliance : France, Russia and the Coming of the First World War*, New York : pantheon, 1984.
- Liska, George F. *Nations in Alliance :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4th ed. New York : Alfred A. Knopf, 1973.
- Morrow, James. "Alliance and Asymmetry :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1991).
- New York Times. *World Almanac*. New York Times Press, 1998.
- Osgood, Robert E.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altimore : Johns Hopkins Press, 1968.
- Pollack, Jonathan D. and Young Koo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Santa Monica : RAND, 1995.
- Sabrosky, Alan, "Interstate Alliances: Their Reliability and the Expansion of War", in J. D. Singer(ed.), *The Correlates of War II: Testing Some Realpolitik Models*, New York: Free Press, 1980.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rch 2006.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and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v c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 G&C Merriam Company, 1964.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U. S. Alliance Strategy by the Change of U. S. Strategy of Northeast Asia's

Noh, Jung Ho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New international order of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has a increasing uncertainty than the age of cold war because of unoptimistic factor like nationalism eruption, religious conflict, trade dispute, environment problems, boundary dispute and nuclear proliferation that threatens worldwide peace and stabilization.

As international order changes, Northeast Asian order also seems to show superpower United States multipolarization appearances but having unstandardized appearance showing two conditions of friction between Korean, American, Japanese support system and Chinese, Russian, North Korean reconstructed cooperation system. The fact that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n order forming virtually flux and uncertain international relations made security environments harder to the politically, militarily weaker nations compared to powerful countries.

cold war has ended in a global view but there's still political, military, territorial legacies of cold war left in the Northeast Asia. While strategy structurally 4 power n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holds stronger military than i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armaments in the area keeps on growing. Because of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special strategic security environment these situation may cause the peninsula to central place of conflict and collision and aspect can appear variously by our security policy. Therefore this paper will diagnosis neighboring countries policy and Korean peninsula's security menace factors according to the American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Plan, and we will also study about the situation and role of South Korea-U.S. alliance which is a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tity and desired developmental suggestions of South Korea-U.S. alliance.

When you look at the features of security environment at the Northeast Asia the region is a strategic stage with economical potential and political influence, it has increasing confusion of transitional period and uncertainty. Although with politically peacemaking atmosphere and military tension easing the region's tension and unstability remains, it is because the region with facing 4 power nations interests directly the nations won't change the position to keep the existing strategic advantages. Therefore with attempts of approach to ease the tension the essential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continued.

Following to the idea, United States main strategy to Northeast Asia is to embrace Japan and siege China. For this idea they will move the central axis of defense policy to Asia and lower dependence of front arrangements including the base of overseas and for replacement they will reduce the weight of forces and increase mobility to strengthen military strength. For China they will choose the blockade strategy that they used during the cold war to block the Soviets southward advance

to keep the growth across asia. For Japan they will develop solid alliance between each other and promote strategy against China and Russia using the complementary profit that two nations share. And for Russia they will use the strategy to turn politically pro-western and develop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military way to restrain China and prevent them from re-arising to the influence of United States.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around korean peninsula can be estimated by new order lead by United States, stimulate of regions supremacy policy, existence of local conflict factors and steady build up of military strength.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displays dual appearance of causing new conflict between the nation within the area and on the other side made them find new partnership at the same time. When we look at the security threats of neighboring nations at this point of view, First, sudden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strategies will lead to unspecific potential threats. Second, changes in the policy and relations of powerful countries may cause sensitive influence on the existence and stability of Korea. Third, it is certain that new conflicts may be caused due to continuous arms race of the region. Fourth, In wide areas security threat factors can develop in to variety of conflicts such as troubles in resources and boundaries on land and ocean, economical conflicts, ethnical conflicts. Also even though facing each other at the moment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s are to develop into settl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named 'sunshine policy', new turnover is no more than emphasizing endless optimistic aspect of future foresight. These factors of threat and neighboring 4 power nations uncertainties of policy on korean peninsula made our security environment harder with its geopolitical specialty.

When we look at the strategies for this point, first to maintain solid

Korea–United States Alliance system we should keep an eye on United States 'alliance choice standard' to make condition for both country to share the profits, and for Japan we have to overcome the unavoidable environment of discord and conflict on the emotional side and both countries should go on honeymoon focusing on the future than the past and maintain strategic partnerships for stability and national interests.

Also for China and Russia, in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area we should keep friendly neighborly relations with China and long-term effort to enhance relations with Russia under the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s geographical environment as well as realities of security and strategic goal. Based on this we should seek to build up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ortheast Asian nations and in a long term put an effort to get at least ability to control military use of neighboring power countries.

